

정책연구
2016-03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고영우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방법	3
제1절 일자리 변동의 구조	3
제2절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	5
1.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5
2.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정의 및 측정	8
3.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13
제3장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특징	17
제1절 분석자료 구축	17
제2절 지역별 일자리 변동 분석	18
1. 지역별 일자리 변동	18
2.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및 집중성	26
3. 사업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의 특징	32
제3절 시군구 단위 일자리 변동 분석	36
1. 수도권 일자리 변동: 서울·인천·경기	36
2. 충청권 일자리 변동: 대전·세종·충북·충남	39
3. 호남권 일자리 변동: 광주·전북·전남	41
4. 대경권 일자리 변동: 대구·경북	44
5. 부울경권 일자리 변동: 부산·울산·경남	45

6. 강원·제주권 일자리 변동: 강원·제주	48
제4절 소 결	48
제4장 지역별 일자리 창출요인 분석: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을	
중심으로	58
제1절 문제제기	58
제2절 선행연구	59
1. 기업동학과 고용창출	59
2. 규모(Size)와 업력(Age)에 따른 고용창출	60
3. 한국의 사업체 분포와 고용창출	62
제3절 실증분석	63
1. 분석자료 및 모형	63
2. 분석결과	65
제4절 소 결	79
제5장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81
제1절 문제제기	81
제2절 선행연구	83
제3절 실증분석	85
1. 분석자료 및 모형	85
2. 분석결과	86
제4절 소 결	91
제6장 결 론	93
참고문헌	96

표 목 차

<표 2- 1> 일자리 변동 관련 주요 개념 정의	7
<표 3- 1>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19
<표 3- 2>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지속사업체	22
<표 3- 3>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구조(2011~2014년 평균)	25
<표 3- 4> 지역별 진입사업체 생존율	27
<표 3- 5>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평균 지속률(2011~2012년 평균)	28
<표 3- 6>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 전체사업체	30
<표 3- 7>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 지속사업체	31
<표 3- 8>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33
<표 3- 9> 사업체 업력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34
<표 3-10> 산업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35
<표 5- 1> 지역별 인구이동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87
<표 5- 2>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	88
<표 5- 3>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소멸률에 미치는 영향	89
<표 5- 4>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재배치율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목차

[그림 2- 1]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구조	4
[그림 2- 2]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개념도	8
[그림 2-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수의 변화	14
[그림 3- 1]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	20
[그림 3- 2]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 ..	21
[그림 3- 3]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지속사업체	24
[그림 3- 4]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 지속사업체	24
[그림 3- 5] 서울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37
[그림 3- 6] 인천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38
[그림 3- 7] 경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38
[그림 3- 8] 대전·세종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 2014년 평균)	39
[그림 3- 9] 충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0
[그림 3-10]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1
[그림 3-11] 광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2
[그림 3-12]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3
[그림 3-13] 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3
[그림 3-14] 대구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4
[그림 3-15]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5
[그림 3-16] 부산·울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 2014년 평균)	46
[그림 3-17]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47
[그림 3-18] 강원·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 2014년 평균)	47
[그림 4- 1] 수도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65
[그림 4- 2] 수도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67
[그림 4- 3] 충청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68
[그림 4- 4] 충청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69
[그림 4- 5] 호남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1
[그림 4- 6] 호남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2
[그림 4- 7] 대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3
[그림 4- 8] 대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4

[그림 4- 9] 부울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5
[그림 4-10] 부울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6
[그림 4-11] 강원·제주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78
[그림 4-12] 강원·제주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	79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가 어떠한지,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지역 간 차이 및 이를 통한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각 장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하여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정착육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업력이 길지 않은 사업체가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 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제 1 장 서 론

기업 및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용의 확장 및 축소, 그리고 시장 진입 및 퇴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자리 변동은 다시 노동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사업체의 동태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의 구조 및 변동,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변동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의 구조 및 변동, 그리고 그 특징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확장 및 축소, 진입 및 퇴출이라는 기업-동태적(firm-dynamic)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편, 노동시장 전체 또는 산업부문별 고용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용의 순변동을 대부분 활용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 또는 일부 산업부문별로 고용의 순변동은 적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가 경제 전체 및 산업부문 내에서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부문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 및 퇴출, 확장 및 축소 등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일자리의 순변동은 낮은 수준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노동시장 전체 또는 산업 수준에서의 총 고용변동만으

로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일자리 변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총 고용변동을 야기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는 어떠하며, 이러한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지리적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기에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이 상이하고, 특히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동학을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지역별로 규명하는 것이 향후 지역 차원의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장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방법¹⁾

제1절 일자리 변동의 구조

신고전과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표적 기업은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an infinitely lived firm)’이다. 따라서 신고전과 노동수요 이론에서는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또는 사업체)들이 외적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규모의 팽창(expansion)과 축소(contraction)를 되풀이하는 행태(behavior)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업들의 행태는 기존 기업의 확장이나 축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생성(birth)과 기존 기업의 소멸(death)이라는 불연속적(discontinuous) 현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을 가정하는 노동시장 이론과 이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분석결과는 기업의 생성 또는 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소멸의 과정 및 정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업장의 생성·소멸이라는 불연속적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일자리 구조 및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노동시장정책들의 유용성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

1) 본 장의 내용인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 방법은 전병유·김혜원(2003) 및 윤윤규·고영우(2009)의 관련 내용을 차용하여 작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들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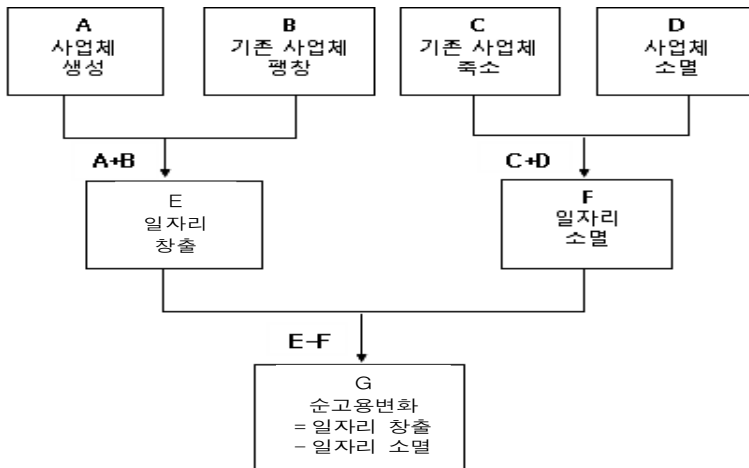
4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나라 경제 전체 또는 어떤 산업으로는 고용의 순변화(net employment changes)가 작다고 해도, 이것이 활발한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확장·축소 현상에 따른 일자리 창출·소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단순히 전체 고용의 변화만으로는 사업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처럼 어떤 시점에 기존 사업체의 확장과 축소, 사업체의 도산·소멸과 창업이 함께 이뤄지면서 사업체 수준에서 일자리 팽창과 축소, 일자리 창출과 소멸 현상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 및 산업 수준에서 일자리 변동의 규모, 구조 및 성격에서의 변화 등 노동시장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소멸이라는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의 구조 및 성격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일자리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1]은 이상의 논의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사업체의 팽창·축소 및 생성·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소멸 및 변동의 구조를 제시한다. 일자리의 전체 흐름(gross job flow)은 다음의 4개 요소로 구성된다: ①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birth)에 기인하는 일자리 창출(A),

(그림 2-1)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구조



자료: 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② 기존 사업체 성장(growth)에 기인하는 일자리 창출(B), ③ 기존 사업체 축소(contraction)에 기인하는 일자리 소멸(C), ④ 사업체 소멸(death)에 기인하는 일자리 소멸(D). 이들 4개의 구성요소와 순고용변화(G , net employment changes) 사이에는 다음의 항등식(identity) 관계가 성립된다.

$$G = A + B - D - C$$

제2절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

1.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일자리 변동의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일자리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자리(job)는 사업체(또는 기업)에서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지위를 의미한다(Davis et al., 1996).

앞서 논의하였듯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고, 그 순변동량의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자리 수의 순변동량만으로 일자리의 변동을 평가·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으로 1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시점에 100개의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년 후인 2014년 기준으로 11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같은 시점에 110개의 일자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201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1년 동안 일자리의 수가 10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수의 변동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기준(2013년)에 존재하였던 100개의 일자리에 더하여 1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2014년 사이에 40개의 일

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30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1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는 1년 동안에 70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6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의 순증가는 똑같이 10개로 된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에 주어진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조합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 수의 순변동량만을 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또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10개의 일자리 순증가 이면에는 40개의 일자리 창출과 30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합하면 1년 동안에 총 70개의 일자리가 변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0개 일자리의 총 변동량 중에서 실제 순변동량 10개를 뺀 60개의 일자리 수 변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변동의 필요를 넘어서서 사업체별 이질성에 의해 야기된 일자리 수 변동량, 즉 초과일자리 변동량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의 변동에 덧붙여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도 존재한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사라져서 해고되었거나, 둘째, 기존 일자리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옮겼거나, 셋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이동하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일자리의 창출·소멸량이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량의 최소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과일자리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의 노동이동의 최댓값이 된다. 위의 예로 다시 설명하면, 만약 창출된 40개의 일자리가 모두 실업자로 충원되고 소멸된 30개의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에 이루어진 노동이동량의 수준은 초과일자리 변동량과 일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창출된 일자리가 실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이동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고, 소멸된 일자리에 취업했던 근로자가 기존 및

신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총 60개 일자리가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에 일어나는 노동이동량의 최댓값이 되는 것이다.

매 시점에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 중에서 큰 값으로 정의되는 최소필요일자리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고용상태가 변화하는 근로자 수의 최솟값이 된다. 즉, 3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개가 소멸될 경우, 이러한 일자리 변동으로 최소한 4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옮기거나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고용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경우에는 최소한 4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옮기거나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고용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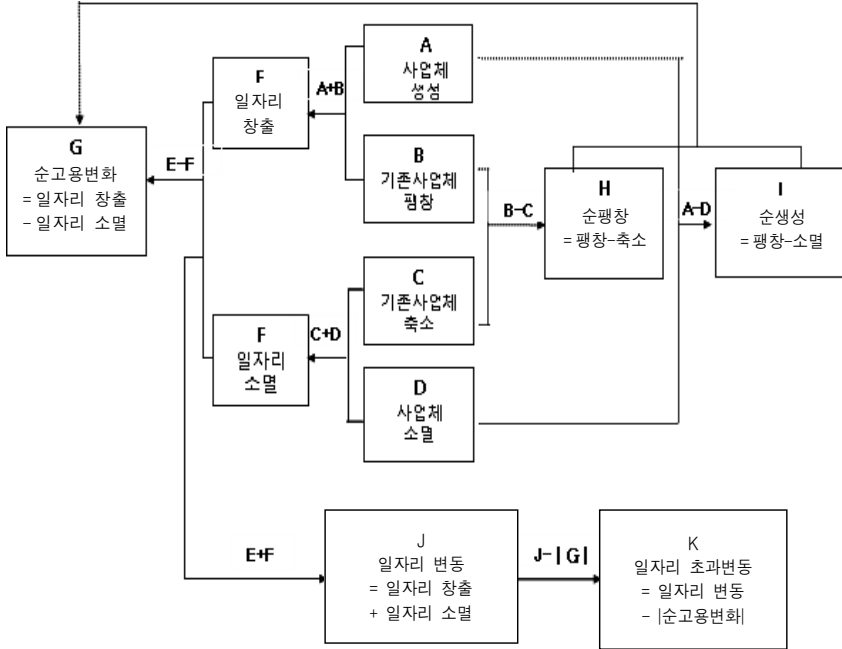
이상의 개념적 설명에 기초하여 일자리 변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그리고 [그림 2-2]에서는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일자리 변동과 관련된 이러한 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2-1> 일자리 변동 관련 주요 개념 정의

주요 개념	정의
일자리창출량	t시점에서 시작하거나 고용규모가 늘어난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늘어난 일자리 수의 합
일자리소멸량	t시점에서 문을 닫거나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감소한 일자리 수의 합
순일자리증가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창출량에서 일자리소멸량을 뺀 값의 합
일자리재배치량	t시점에서 모든 사업체의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의 합
초과일자리 변동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재배치량에서 순일자리증가량의 절대값을 뺀 값
근로자이동량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일자리를 바꾼 근로자의 수
최소 필요 근로자 이동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 중 큰 값

자료: 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그림 2-2]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개념도



자료: 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2.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정의 및 측정

먼저 t 기에 부문 s 에 속한 사업체 e 의 일자리 수를 EMP_{est} 라고 하자. 이때 사업체별 일자리 창출량(JC)과 일자리 소멸량(J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JC_{est} = \Delta EMP_{est} \quad \text{if } \Delta EMP_{est} \geq 0 \quad (2-1)$$

$$JD_{est} = |\Delta EMP_{est}| \quad \text{if } \Delta EMP_{est} < 0 \quad (2-2)$$

여기서 ΔEMP_{est} 는 $EMP_{est} - EMP_{es(t-1)}$, 즉 t 기와 $t-1$ 기의 일자리 수의 차이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체의 일자리가 2013년 25개에

서 2014년에 30개로 늘어나 순일자리 증가가 5개로 관측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체 내부적으로 설계직 5개, 판매부서 7개 등 총 1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경리부서에서 7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결과일 수 있다. 즉, A라는 사업체 내에서 관찰되는 5개의 순일자리 증가는 12개의 일자리 창출과 7개의 일자리 소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체 내부의 세분된 일자리별 고용량이 측정되지 않으며, 또한 외국의 유사한 사업체 통계자료의 경우도 대부분 그러하다. 이러한 분석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사업체 수준에서는 일자리 변동량이 일자리 창출 또는 소멸 중 하나로만 관측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 변동의 측정은 사업체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일자리 규모(JS)를 다음과 같이 t 기와 $t-1$ 기의 일자리 수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JS_{est} = \frac{EMP_{est} + EMP_{es(t-1)}}{2} \quad (2-3)$$

대부분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는 일자리 변동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t 기의 일자리 창출량 및 소멸량을 $t-1$ 기의 일자리 수로 나누기보다는 t 기와 $t-1$ 기의 일자리 수의 평균값인 JS_{est} 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t 기의 일자리 변동량을 $t-1$ 기의 일자리 수로 나누는 일반적인 증가율 계산방법과 비교하여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와 퇴출되는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의 값 또는 음의 무한대 값이 아니라 +2 또는 -2의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률과 통합적으로 다루기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정의된 몇 가지 개념을 사용하면 다양한 일자리 변동률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률(JCR)과 일자리 소멸률(JDR)은 각각 일자리 규모(JS)에 대한 일자리 창출량(JC)과 일자리 소멸량(JD)의 비율로 정의된다.²⁾

2) 이하에서 제시되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등 대부분의 일자리 변동비율 값들은 이후 제시되는 식의 값에 100을 곱하여 제시되었다.

$$JCR_{est} = \frac{JC_{est}}{JS_{est}}, \quad JDR_{est} = \frac{JD_{est}}{JS_{est}} \quad (2-4)$$

t 기의 진입사업체는 $t-1$ 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t 기에 존재하는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 경우 $t-1$ 기의 일자리량, $EMP_{es(t-1)} = 0$ 이므로 평균 일자리량, JS_{est} 는 $EMP_{est}/2$ 가 되며, 따라서 t 기 진입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JCR)은 2의 값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t-1$ 기에는 존재하였으나 t 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로 정의되는 t 기 퇴출사업체의 경우, t 기의 일자리량, $EMP_{est} = 0$ 이므로 평균 일자리량, JS_{est} 는 $EMP_{es(t-1)}/2$ 가 되어 t 기 퇴출사업체의 일자리 소멸률(JDR)은 2의 값을 갖는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경제 전체 수준에서 집계한 집계적 일자리 창출률(JCR_t)과 일자리 소멸률(JDR_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JCR_t = \frac{\sum_{e \in \Omega} JC_{est}}{\sum_{e \in \Omega} JS_{est}}, \quad JDR_t = \frac{\sum_{e \in \Omega} JD_{est}}{\sum_{e \in \Omega} JS_{est}} \quad (2-5)$$

여기서 Ω 는 경제 전체에 속하는 사업체 전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집계적 일자리 창출률(JCR_t)과 일자리 소멸률(JDR_t)을 사용하면, 경제 전체에서 집계적 순일자리 증가율(JGR_t), 그리고 일자리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집계적 일자리 재배치율(JRR_t)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JGR_t = JCR_t - JDR_t \quad (2-6)$$

$$JRR_t = JCR_t + JDR_t \quad (2-7)$$

위의 식 (2-6)과 (2-7)로부터 알 수 있듯이, 순일자리 증가율(JGR_t)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도 일자리 재배치율(JRR_t)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률이 0.25, 소멸률이 0.2인 경우와 일자리 창출률이 0.07, 소멸률이 0.02인 경우, 순일자리 증가율(JGR_t)은 0.05로 동일

하게 계산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0.45이고, 후자는 0.09에 불과하다.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되고 소멸되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소멸이 거의 없는 경제 모두 순일자리 증가율은 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일자리 증가율은 경제 내의 일자리 변동의 동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재배치율에 대한 분석은 순일자리 증가율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자리 변동 규모에서 경제 전체에 필요한 순일자리 증가분을 제외하고 초과로 이루어진 일자리 변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초과일자리 변동률(JER_t)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JER_t = JRR_t - |JGR_t| \quad (2-8)$$

초과일자리 변동률(JER_t)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예를 통해 다시 설명하자. 2013~2014년 동안 총 일자리가 100개에서 110개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이 각각 40개와 30개였다고 하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10개만큼의 일자리가 생성됐지만 경제 내부에서는 총 70개만큼의 일자리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동된 70개의 일자리, 즉 일자리 재배치량 가운데 10개는 경기확장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요구된 고용증가, 즉 순일자리 증가량으로, 그리고 나머지 60개의 일자리는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일자리 변동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과일자리 변동률은 이러한 60개 일자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값을 의미한다.

집계적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JMR_t)은 매년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중에서 큰 값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경기변동 등의 원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근로자 이동이 야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JMR_t = \text{Max}[JCR_t, JDR_t] \quad (2-9)$$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체의 특성(산업 등) 및 부분적으로는 일자리의 특성(중사상 지위 등)에 따라 전체 사업체(또는 사업

체 내부의 일자리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서 부문 간 일자리 변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집계된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변동의 제 비율들을 도출한 것과 동일하다.

부문 s 에 속한 사업체의 집합을 Ω_s 라 하면, 부문 s 의 일자리 창출량(JC_{st}), 일자리 소멸량(JD_{st}), 일자리 규모(JS_{s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JC_{st} = \sum_{e \in \Omega_s} JC_{est}, \quad JD_{st} = \sum_{e \in \Omega_s} JD_{est}, \quad JS_{st} = \sum_{e \in \Omega_s} JS_{est} \quad (2-10)$$

위의 식 (2-10)에서 정의된 개념들을 사용하면, 부문별 일자리 창출률(JCR_{st})과 일자리 소멸률(JDR_{st}),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일자리 변동 비율, 즉 순일자리 증가율(JGR_{st}), 일자리 재배치율(JRR_{st}), 초과일자리 변동률(JER_{st}) 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JCR_{st} &= \frac{JC_{st}}{JS_{st}}, & JDR_{st} &= \frac{JD_{st}}{JS_{st}} \\ JGR_{st} &= JCR_{st} - JDR_{st} \\ JRR_{st} &= JCR_{st} + JDR_{st} \\ JER_{st} &= JRR_{st} - |JGR_{st}| \end{aligned} \quad (2-11)$$

부문별 일자리 변동 비율들을 계산함에 있어 몇 가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t-1$ 시점에 부문 s_1 에 속했던 사업체가 t 시점에서는 부문 s_2 ($s_2 \neq s_1$)에 속한 경우, 이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이 부문 s_1 에서의 일자리 변동인지 부문 s_2 에서의 일자리 변동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 시점과 $t-1$ 시점에서 사업체의 부문을 동일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치형 자료가 분류 기준인 경우에는 각 사업체가 속하는 부문을 해당 사업체의 t 기와 $t-1$ 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할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의 규모가 $t-1$ 기에는 8인으로 1그룹(5인 이상 10인 미만)이었고

t 기에는 16인으로 2그룹(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면, 두 시기의 규모의 평균값인 12를 이용하여 t 기와 $t-1$ 기 모두 2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수치형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문을 구분할 경우에는 t 기와 $t-1$ 기 사이에 부문 간 이동을 하는 사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치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산업분류 및 지역분류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시점(t 기 또는 $t-1$ 기)에 속하였던 부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³⁾

3.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일자리 변동이 매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이라 함은, 한 번 창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사업체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및 한 번 소멸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를 의미한다.

가. 일자리 지속량의 개념

일자리 창출의 지속량은 t 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일자리 소멸의 지속량은 t 기에 소멸된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도 여전히 소멸된 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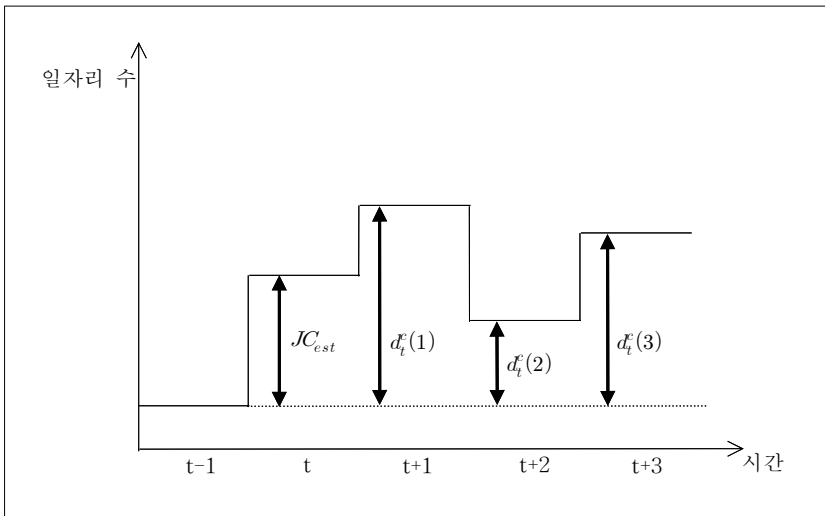
이상의 개념적인 정의를 다음의 [그림 2-3]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기업의 일자리 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일자리의 수를 의미한다.

3) 본 연구의 기본 연구대상 단위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일종의 진입 및 퇴출로 인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외 산업 등 기타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해당기(t 기)를 기준으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였다.

14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여기서 JC_{est} 는 앞에서의 정의와 같이 t 기에 창출된 일자리 수를 의미하고, $d_t^c(i)$ 는 $(t-1)$ 기로부터 $(t+i)$ 기에 늘어난 일자리 수로 정의된다. 즉, t 기에 JC_{est}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된 후, i 기간 후인 $(t+i)$ 기의 일자리 수가 $(t-1)$ 기보다 줄어들어 있다면 $d_t^c(i)$ 의 값은 0이 되는 것이다. [그림 2-3]의 예에서, $d_t^c(1)$ 이 JC_{est} 보다 크므로 t 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1기간 후에 모두 살아남아 있고, JC_{est} 보다 작은 $d_t^c(2)$ 로부터 t 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2기간 후인 $(t+2)$ 기에 $d_t^c(2)$ 의 일자리 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d_t^c(2)$ 보다 큰 $d_t^c(3)$ 에 대한 해석이다. [그림 2-3]의 예에서, $d_t^c(3)$ 가 $d_t^c(2)$ 는 물론, JC_{est} 보다도 크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t 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3기간 후에도 모두 잔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t 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이미 2기간이 지난 후인 $(t+2)$ 기에 $d_t^c(2)$ 만큼만 살아남았으므로, 그 이후에 늘어난 일자리는 그 시점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이지 t 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3기간이 지난 후인 $(t+3)$ 기의 일자리 지속량 역시 $d_t^c(2)$ 이다.

[그림 2-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수의 변화



자료: 전병유·김혜원(2003)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창출된 일자리 중 j기간 후 지속량 $P_{est}^c(j)$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_{est}^c(j) = \text{Min}[JC_{est}, d_t^c(1), d_t^c(2), \dots, d_t^c(j)] \quad (2-12)$$

여기서 $d_t^c(j) = \text{Max}[EMP_{es(t+j)} - EMP_{es(t-1)}, 0]$ 이다. 마찬가지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소멸된 일자리 중 j기간 후 지속량 $P_{est}^d(j)$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_{est}^d(j) = \text{Min}[JD_{est}, d_t^d(1), d_t^d(2), \dots, d_t^d(j)] \quad (2-13)$$

여기서 $d_t^d(j) = \text{Max}[-(EMP_{es(t+j)} - EMP_{es(t-1)}), 0]$ 으로, (t-1)기의 일자리 수로부터 (t+j)기에 줄어든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나.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 측정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t기에 창출 또는 소멸된 일자리 중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1년 지속률은 2010년에 창출된 일자리 중 2011년에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소멸의 2년 지속률은 2010년에 소멸된 일자리 중 2년 후인 2012년에도 여전히 소멸된 채 유지되고 있는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의 j년 지속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_{est}^c(j) = \frac{P_{est}^c(j)}{JC_{est}} \quad (2-14)$$

마찬가지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소멸된 일자리의 j년 지속률은 다음과 같다.

$$p_{est}^d(j) = \frac{P_{est}^d(j)}{JD_{est}} \quad (2-15)$$

다. 집계적/부문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 측정

일자리 창출률, 소멸률 등과 더불어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도 경제 전체, 또는 각 부문별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의 집계적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_t^c(j) = \frac{\sum_{e \in \Omega_t^c} P_{est}^c(j)}{JC_t} \quad (2-16)$$

$$p_t^d(j) = \frac{\sum_{e \in \Omega_t^d} P_{est}^d(j)}{JD_t} \quad (2-17)$$

여기서 Ω_t^c 는 t기에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체의 집합을, Ω_t^d 는 t기에 일자리가 소멸된 사업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부문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다음과 같다.

$$p_{st}^c(j) = \frac{\sum_{e \in \Omega_{st}^c} P_{est}^c(j)}{JC_{st}} \quad (2-18)$$

$$p_{st}^d(j) = \frac{\sum_{e \in \Omega_{st}^d} P_{est}^d(j)}{JD_t} \quad (2-19)$$

여기서 Ω_{st}^c 는 t기에 일자리가 창출된 부문 s에 속한 사업체의 집합을, Ω_{st}^d 는 t기에 일자리가 소멸된 부문 s의 사업체 집합을 의미한다.

제 3 장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특징

제1절 분석자료 구축

일자리 창출과 소멸 등의 동태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수준에서 종사자 수 정보가 있는 연도별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유사한 연구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협DB’이다. 이 중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체를 인식하여 패널자료 구축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개별 사업체 인식을 위한 사업체 식별변수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통계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통계원자료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의 사업체 ID를 제공받음으로써 5년간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사업체 형태, 설립연도 등과 같은 항목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일자리 변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⁴⁾

4)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사

제2절 지역별 일자리 변동 분석

1. 지역별 일자리 변동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이 상이한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률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성격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사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은 이렇게 분류된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소멸률의 경우에는 서울, 광주, 경기, 인천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광주, 인천, 경북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 변동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정인수 외, 2003; 윤윤규·고영우, 2009). 하지만 이것만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각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을 연도별로 정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의 편차는 시간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지역별 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분석 대상 기간이 서로

업체의 조사가 일시적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사실패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퇴출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3-1〉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변동률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
서울특별시	18.8	23.9	-5.1	42.7	37.6	23.9
부산광역시	18.0	19.9	-1.9	37.9	36.0	19.9
대구광역시	18.2	20.1	-1.9	38.3	36.4	20.1
인천광역시	18.5	21.1	-2.6	39.6	37.0	21.1
광주광역시	19.3	22.3	-3.0	41.6	38.6	22.3
대전광역시	18.6	20.3	-1.7	38.9	37.2	20.3
울산광역시	17.9	18.9	-1.0	36.8	35.8	18.9
세종시	20.3	14.1	6.2	34.4	28.2	20.3
경기도	19.4	21.2	-1.8	40.6	38.8	21.2
강원도	17.3	18.5	-1.2	35.8	34.6	18.5
충청북도	17.8	18.8	-1.0	36.6	35.6	18.8
충청남도	18.8	19.3	-0.5	38.1	37.6	19.3
전라북도	17.6	19.4	-1.8	37.0	35.2	19.4
전라남도	17.2	19.1	-1.9	36.3	34.4	19.1
경상북도	16.4	18.8	-2.4	35.2	32.8	18.8
경상남도	17.6	19.2	-1.6	36.8	35.2	19.2
제주도	19.3	20.3	-1.0	39.6	38.6	20.3
전국	18.5	21.0	-2.5	39.5	37.0	21.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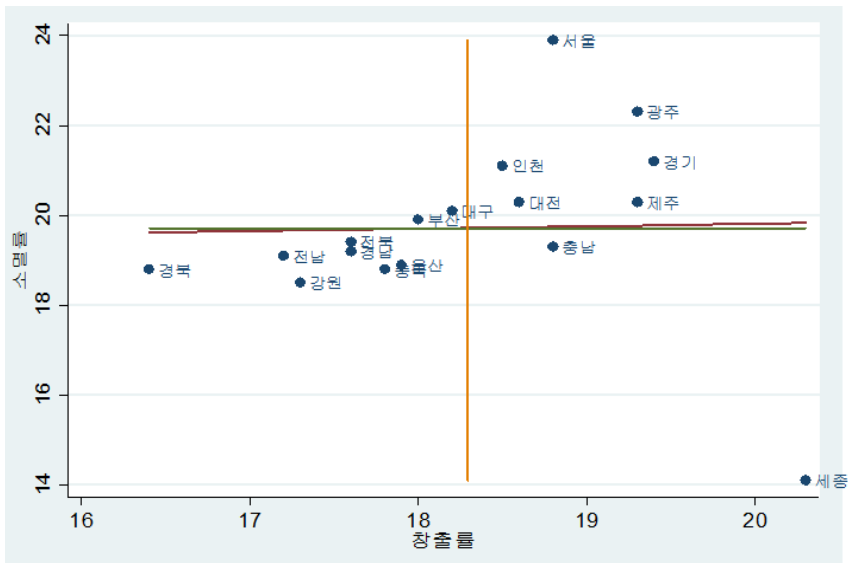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시점 간의 일률적이지 않은 변화는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고려 없이 실시되고 있는 일률적인 고용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표 3-1>로부터 일자리 변동률들의 지역 간 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과 더불어,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고용정책의 효과가 상이한 기인한 데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표 3-1>의 결과로부터 일자리 변동률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동학의 구조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윤윤규·고영우, 2009).

[그림 3-1]은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분포가 다소 퍼져 있으며, 두 변동률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 강원 등은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서울, 광주, 경기 등은 높은 창출률과 높은 소멸률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세종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 즉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순증가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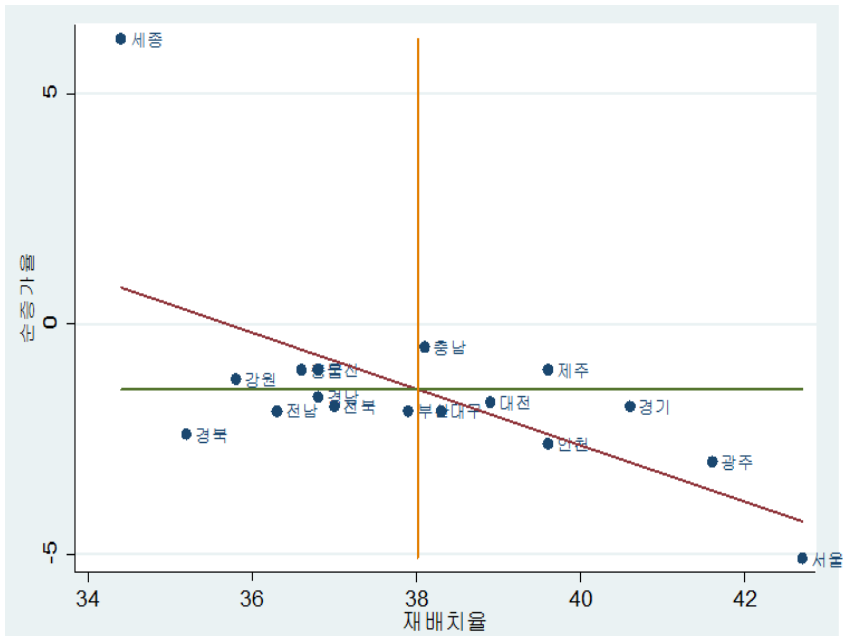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0536, 표준오차는 0.5365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2]는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의 경우와 달리,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북과 전남 지역은 낮은 순증가율과 낮은 재배치율로 비교적 일자리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충남, 제주 등은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높은 순증가율과 높은 재배치율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종 지역은 순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재배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울 및 광주 지역은 높은 재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6117 , 표준오차는 0.1977 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2〉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 지속사업체

(단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변동률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
서울특별시	13.7	14.5	-0.8	28.2	27.4	14.5
부산광역시	11.8	11.7	0.1	23.5	23.4	11.8
대구광역시	11.8	11.7	0.1	23.5	23.4	11.8
인천광역시	11.9	12.0	-0.1	23.9	23.8	12.0
광주광역시	12.3	12.9	-0.6	25.2	24.6	12.9
대전광역시	11.9	12.0	-0.1	23.9	23.8	12.0
울산광역시	11.9	11.6	0.3	23.5	23.2	11.9
세종시	11.6	10.0	1.6	21.6	20.0	11.6
경기도	12.7	12.4	0.3	25.1	24.8	12.7
강원도	11.6	11.4	0.2	23.0	22.8	11.6
충청북도	11.9	11.4	0.5	23.3	22.8	11.9
충청남도	12.2	11.5	0.7	23.7	23.0	12.2
전라북도	11.6	12.1	-0.5	23.7	23.2	12.1
전라남도	11.7	12.3	-0.6	24.0	23.4	12.3
경상북도	11.1	11.8	-0.7	22.9	22.2	11.8
경상남도	11.3	11.5	-0.2	22.8	22.6	11.5
제주도	12.5	13.1	-0.6	25.6	25.0	13.1
전국	12.4	12.6	-0.2	25.0	24.8	12.6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창출된 일자리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소멸된 일자리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t-1$ 기)와 현재(t 기) 모두 존재하는 지속사업체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진입과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지속사업체의 평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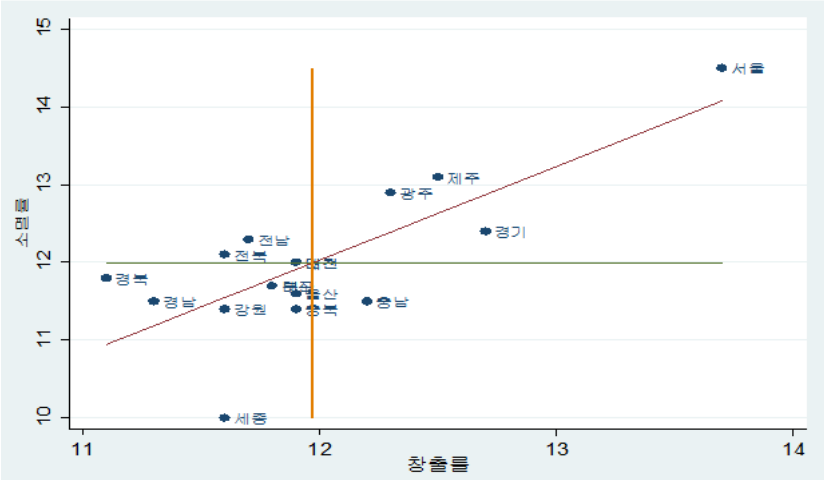
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수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진입과 퇴출 사업체를 고려한 전체 사업체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달리, 순일자리 증가율이 미약하게나마 양수(+)로 추정되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 사업체의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제주, 광주 등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일자리 증가율은 세종 및 충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 경북, 광주, 제주 등의 지역에 있는 지속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은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선 전체 사업체의 경우와 달리,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분포가 다소 퍼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두 변동률 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전남, 강원 지역 외에도 세종 지역 역시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광주, 경기, 제주 등은 높은 창출률과 높은 소멸률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는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전체 사업체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북과 경남 지역은 낮은 순증가율과 낮은 재배치율의 비교적 일자리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경기 지역은 높은 순증가율과 높은 재배치율을 나타내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지속사업체의 경우 역시 순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재배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울, 제주, 광주 등의 지역은 높은 재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특징과 유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4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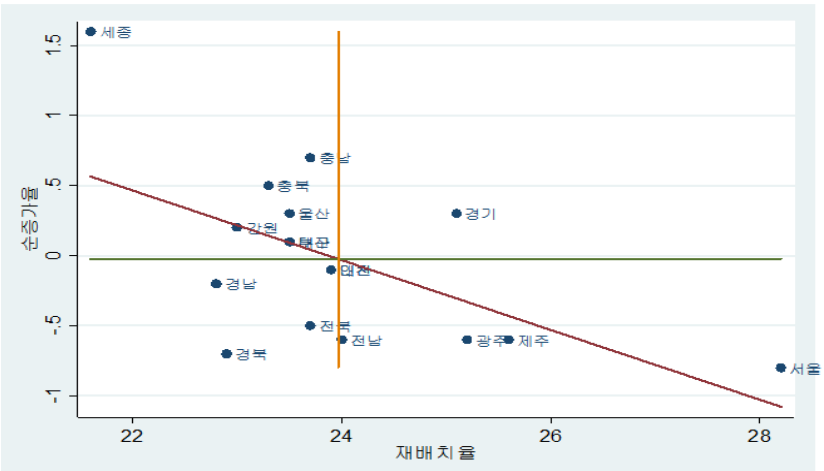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 지속사업체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1.2043, 표준오차는 0.2599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4]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 : 지속사업체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2492, 표준오차는 0.0885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3〉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구조(2011~2014년 평균)

(단위: 명, %)

	일자리창출 비중			일자리소멸 비중		
	창출량	진입 사업체 창출	지속 사업체 확장	소멸량	퇴출 사업체 소멸	지속 사업체 축소
서울특별시	826,799	33.7	66.3	1,049,883	44.2	55.8
부산광역시	223,500	39.7	60.3	246,876	45.7	54.3
대구광역시	147,923	40.7	59.3	163,326	46.2	53.8
인천광역시	157,034	41.4	58.6	178,719	48.0	52.0
광주광역시	97,166	42.1	57.9	112,182	47.2	52.8
대전광역시	94,817	41.6	58.4	103,584	45.8	54.2
울산광역시	81,280	38.8	61.2	86,024	43.1	56.9
세종시	10,617	46.5	53.5	7,582	29.0	71.0
경기도	767,440	40.3	59.7	840,585	46.5	53.5
강원도	88,846	37.5	62.5	94,936	42.4	57.6
충청북도	99,037	38.1	61.9	104,822	43.4	56.6
충청남도	137,599	40.3	59.7	141,879	44.4	55.6
전라북도	103,857	39.3	60.7	114,406	42.0	58.0
전라남도	101,399	36.5	63.5	113,146	39.9	60.1
경상북도	156,100	37.4	62.6	178,571	41.1	58.9
경상남도	214,229	40.9	59.1	233,543	44.7	55.3
제주도	40,661	40.2	59.8	42,618	40.2	59.8
전국	3,345,634	38.4	61.6	3,810,783	44.8	55.2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변동률은 지역별로 일정한 상관관계 없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3>은 일자리 변동의 구조를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총 일자리 창출량 중 진입사업체의 일자리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이 많이 높고, 광주, 대전, 인천 등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지역은 진입사업체에 의한 창출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광주, 대전, 인천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사업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로부터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반대로, 일자리 소멸량 중 퇴출사업체에 의해 소멸되는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그리고 세종, 전남, 제주 등지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및 집중성

가.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업체에 의해 창출된 일자의 비중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4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체에 의한 일자리 소멸량의 비중 역시 40%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바로 퇴출됨으로써 많은 양의 일자리 소멸을 야기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들이 이후 얼마나 시장에서 생존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표 3-4>는 진입사업체들의 연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 진입한 다음 연도에는 약 70~75%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체들의 퇴출이 발생하여, 2년 생존율은 대략 50%대, 즉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3년 생존율은 약 4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업체 중 3년 동안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지역별 진입사업체 생존율

(단위: 개, %)

	2011년 진입				2012년 진입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서울특별시	71,013	72.4	53.2	39.6	91,670	74.0	52.1
부산광역시	22,649	74.5	55.8	43.1	30,897	74.2	53.8
대구광역시	16,954	75.0	56.4	42.3	22,331	74.6	52.2
인천광역시	16,479	72.4	51.9	39.7	23,893	70.2	50.4
광주광역시	10,109	74.7	54.4	40.2	14,732	74.2	52.4
대전광역시	10,718	72.7	52.6	40.3	14,383	73.0	51.4
울산광역시	7,499	73.9	55.2	43.6	9,897	76.7	54.1
세종시	-	-	-	-	694	74.6	55.0
경기도	77,274	72.7	53.7	41.4	101,459	73.4	52.3
강원도	9,940	76.5	59.2	47.3	13,868	76.9	57.1
충청북도	10,181	73.4	55.0	42.7	14,411	76.1	54.8
충청남도	12,805	73.2	54.8	43.2	16,011	75.7	55.6
전라북도	11,298	75.2	56.5	43.5	14,718	75.4	55.2
전라남도	9,685	78.1	61.9	49.4	12,755	77.6	56.9
경상북도	16,083	76.3	59.1	46.7	21,237	76.8	56.6
경상남도	21,720	75.6	57.1	44.3	29,279	75.1	53.9
제주도	3,693	77.3	60.2	47.6	5,882	77.9	58.5
전국	328,100	73.9	55.1	42.3	438,117	74.4	53.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5〉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평균 지속률(2011~2012년 평균)

(단위:%)

	전체 사업체				지속 사업체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서울특별시	54.6	37.8	86.1	80.9	50.2	34.7	76.4	67.5
부산광역시	58.1	39.7	84.2	79.1	52.8	34.8	72.1	62.9
대구광역시	58.0	40.2	84.5	79.2	51.6	34.9	72.4	63.0
인천광역시	55.3	38.1	84.9	79.8	48.7	32.7	72.9	63.8
광주광역시	56.2	38.3	85.2	80.4	50.9	34.0	73.4	65.0
대전광역시	58.0	41.6	84.7	79.8	53.0	38.2	73.6	65.2
울산광역시	56.6	40.3	78.3	73.5	49.8	35.5	64.9	57.3
세종시	61.2	44.8	69.7	61.3	55.7	38.6	69.7	61.3
경기도	56.9	39.8	85.1	80.1	51.3	35.3	73.3	64.4
강원도	59.5	42.3	83.8	77.4	53.8	37.2	72.8	62.1
충청북도	58.6	41.3	83.8	77.9	52.8	36.4	72.6	62.8
충청남도	58.0	42.9	85.0	79.9	49.9	34.6	73.3	64.2
전라북도	56.3	39.7	83.9	78.0	49.8	34.2	73.5	63.9
전라남도	56.3	39.7	83.1	77.1	50.2	34.3	73.1	63.5
경상북도	58.0	40.8	83.6	77.8	52.1	35.8	73.0	63.7
경상남도	56.8	39.8	83.9	78.1	50.4	35.0	72.6	62.8
제주도	57.9	41.7	83.5	75.3	50.8	35.4	73.9	61.1
전국	56.6	39.6	84.8	79.5	51.0	35.0	73.8	64.7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과 2012년 발생한 일자리 변동에 대한 1년 및 2년 지속률을 측정하였다. <표 3-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 기에 새롭게 변동된 일자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t 시점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t-1)$ 기에도 존재하던 지속사업체에서 확장된 일자리와 $(t-1)$ 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진입사업체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나뉜다. 또한, 소멸된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사업체에서 축소된 일자리와 퇴출사업체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

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퇴출사업체의 소멸 지속률은 100%이므로, 지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멸 지속률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측정된 값보다 작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5>에 제시되어 있는 지속률 결과로부터, 앞서 유추한 바와 같이 지속사업체에 의한 소멸 지속률이 전체 사업체의 소멸 지속률보다 낮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창출 지속률이 소멸 지속률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년 만에 바로 약 40% 이상 사라지고, 2년 후에는 6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멸된 일자리는 지속사업체에서조차 2년이 지나도 60% 넘는 일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및 충청도 지역에서 창출 지속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광주, 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멸 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

일자리 변동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부 사업체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충격 및 생산성충격에 사업체가 반응하여 유발되는 노동수요의 변화가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폭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 변동량 중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소규모 일자리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체의 비중과 소규모 조정을 하는 사업체의 비중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 총량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고용조정 그룹으로 분류된 구성비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사업

체의 일자리 변동에서 창출률과 소멸률이 각각 0.2 이하인 경우가 창출률과 소멸률을 설명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 6.7~9.9% 정도로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6〉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 : 전체 사업체
(단위: %)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창출률		
	[-2,-1]	[-1,-0.2]	[-0.2,0]	(0,0.2]	(0.2,1]	(1,2]
서울특별시	50.7	42.1	7.2	8.7	47.9	43.4
부산광역시	47.9	44.1	8.0	9.1	47.8	43.1
대구광역시	49.0	43.7	7.3	8.3	48.1	43.6
인천광역시	51.1	41.0	7.9	9.5	44.8	45.7
광주광역시	51.0	42.3	6.7	7.6	44.6	47.8
대전광역시	51.0	41.7	7.3	8.2	43.1	48.7
울산광역시	49.8	42.5	7.7	8.9	43.7	47.4
세종시	41.2	49.5	9.3	7.8	41.0	51.2
경기도	48.2	43.2	8.6	9.9	45.7	44.4
강원도	45.5	47.1	7.4	8.0	49.8	42.2
충청북도	47.5	44.4	8.1	9.2	46.0	44.8
충청남도	46.6	45.5	7.9	9.1	46.5	44.4
전라북도	48.2	44.5	7.3	8.3	48.0	43.7
전라남도	43.8	48.6	7.6	8.8	51.3	39.9
경상북도	45.8	46.1	8.1	9.1	47.4	43.5
경상남도	47.4	44.4	8.2	9.3	46.3	44.4
제주도	44.6	47.3	8.1	8.5	47.1	44.4
전국	48.6	43.6	7.8	9.0	46.8	44.2

주: 집중도 분석을 위해 일자리 변동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창출률과 대비하기 위해 소멸률을 음수(-)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7〉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 : 지속사업체

(단위:%)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창출률		
	(-2,-1)	[-1,-0.2)	[-0.2,0)	(0,0.2]	(0.2,1]	(1,2)
서울특별시	7.2	79.3	13.5	14.4	79.3	6.3
부산광역시	4.6	80.8	14.6	15.3	80.3	4.4
대구광역시	4.8	81.7	13.5	14.1	81.5	4.4
인천광역시	5.5	79.2	15.3	16.6	78.5	4.9
광주광역시	6.1	81.0	12.9	13.7	80.5	5.8
대전광역시	5.2	80.7	14.1	15.2	80.0	4.8
울산광역시	5.3	80.2	14.5	16.0	79.1	4.9
세종시	4.6	80.4	15.0	15.0	79.2	5.8
경기도	5.5	78.9	15.6	16.9	78.1	5.0
강원도	4.4	82.6	13.0	13.3	82.6	4.1
충청북도	5.0	80.4	14.6	15.9	79.5	4.6
충청남도	5.4	80.7	13.9	15.6	79.5	4.9
전라북도	5.5	81.1	13.4	14.0	81.2	4.8
전라남도	5.1	82.0	12.9	13.9	81.3	4.8
경상북도	5.4	80.5	14.1	15.4	80.0	4.6
경상남도	4.9	80.3	14.8	16.0	79.5	4.5
제주도	5.2	81.1	13.7	14.6	80.8	4.6
전국	5.7	80.0	14.3	15.3	79.6	5.2

주: 집중도 분석을 위해 일자리 변동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창출률과 대비하기 위해 소멸률을 음수(-)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진입 및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만으로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살펴보면, 창출률과 소멸률이 0.2 이하인 경우가 창출량과 소멸량을 설명하는 비율이 약 12.9~16.9% 정도로 전체 사업체의 경우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집단(변동률 1 초과 2 미만)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고용조정의 대부분이 진입 및 퇴출에 의한 것이고, 진입 및 퇴출은 그 정

의상 2의 변동률로 측정될 뿐,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고용조정이 수치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소멸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소멸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창출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광주, 세종 등지에서 대규모 창출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업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의 특징

지금까지 전체 또는 지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결과, 순일자리 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사업체 규모별, 업력별,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패턴이 지역 권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체 규모의 변동을 고정하기 위해, t 기와 $(t-1)$ 기의 평균 일자리 수를 사업체 규모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사업체 규모를 총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규모 그룹별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였다. <표 3-8>은 사업체 규모를 총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한 결과를 지역 권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재배치율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일자리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산업구조 및 사업체 규모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부터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아져 일자리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순일자리 증가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수준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으로 감소하다

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체 규모와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에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들(전병유·김혜원, 2003; 윤윤규·고영우, 2009)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5인 미만	5~10인	10~20인	20~50인	50~100인	100~300인	300~500인	500인 이상
수도권	A	27.8	20.9	18.6	16.4	13.2	13.0	14.9	10.8
	B	31.8	24.0	22.7	20.0	15.8	16.3	16.5	13.8
	A-B	-4.0	-3.1	-4.1	-3.6	-2.6	-3.3	-1.6	-3.0
충청권	A	26.0	20.1	18.2	16.5	12.2	12.6	11.5	12.7
	B	27.4	21.9	20.9	18.1	12.9	12.1	10.5	10.6
	A-B	-1.4	-1.8	-2.7	-1.6	-0.7	0.5	1.0	2.1
호남권	A	24.7	19.5	18.4	16.2	12.2	10.6	10.8	6.9
	B	27.1	22.5	21.9	19.1	13.3	12.8	13.3	5.4
	A-B	-2.4	-3.0	-3.5	-2.9	-1.1	-2.2	-2.5	1.5
대경권	A	24.0	19.1	18.0	15.1	11.1	10.7	10.3	7.3
	B	26.4	21.7	20.7	17.7	12.3	12.8	10.7	8.2
	A-B	-2.4	-2.6	-2.7	-2.6	-1.2	-2.1	-0.4	-0.9
부울경권	A	25.1	20.0	18.7	16.4	12.2	12.2	12.5	7.4
	B	27.5	22.1	22.0	18.8	12.6	12.3	10.9	7.4
	A-B	-2.4	-2.1	-3.3	-2.4	-0.4	-0.1	1.6	0.0
강원 제주권	A	24.0	18.3	16.7	14.1	10.8	11.4	11.3	11.1
	B	25.0	20.5	18.9	15.7	11.9	11.3	10.0	9.5
	A-B	-1.0	-2.2	-2.2	-1.6	-1.1	0.1	1.3	1.6
전국	A	26.3	20.3	18.4	16.1	12.5	12.4	13.4	10.0
	B	29.2	23.0	22.0	19.1	14.2	14.5	14.2	11.5
	A-B	-2.9	-2.7	-3.6	-3.0	-1.7	-2.1	-0.8	-1.5

주: 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사업체의 업력별로 일자리 변동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았다. 지역 권역에 상관없이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순일자리 증가율의 경우에는 업력이 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사업체 업력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5년	16년 이상
수도권	A	16.1	14.2	13.7	13.3	12.5	12.1	12.0	9.9
	B	36.3	30.7	27.2	24.0	22.3	21.1	20.2	16.1
	A-B	-20.2	-16.5	-13.5	-10.7	-9.8	-9.0	-8.2	-6.2
충청권	A	15.4	12.8	12.1	12.2	11.6	11.4	11.1	9.4
	B	32.3	28.0	24.5	22.0	19.0	18.5	17.5	12.3
	A-B	-16.9	-15.2	-12.4	-9.8	-7.4	-7.1	-6.4	-2.9
호남권	A	15.0	13.0	12.2	11.8	11.9	11.6	11.0	9.2
	B	34.6	28.5	24.7	22.8	20.0	19.6	18.5	13.5
	A-B	-19.6	-15.5	-12.5	-11.0	-8.1	-8.0	-7.5	-4.3
대경권	A	15.0	12.8	11.5	11.6	11.3	11.4	10.5	8.4
	B	33.6	27.6	24.5	21.6	19.5	18.4	16.8	12.7
	A-B	-18.6	-14.8	-13.0	-10.0	-8.2	-7.0	-6.3	-4.3
부울경권	A	14.5	12.6	12.0	11.5	11.7	11.3	10.4	9.0
	B	34.3	28.2	23.4	21.2	20.2	18.1	16.5	12.4
	A-B	-19.8	-15.6	-11.4	-9.7	-8.5	-6.8	-6.1	-3.4
강원 제주권	A	14.8	12.4	12.4	11.2	11.3	11.2	11.1	9.8
	B	31.7	27.8	23.6	20.8	19.6	18.6	17.8	13.0
	A-B	-16.9	-15.4	-11.2	-9.6	-8.3	-7.4	-6.7	-3.2
전국	A	15.5	13.5	12.9	12.6	12.1	11.8	11.4	9.5
	B	35.0	29.4	25.7	22.9	21.1	19.9	18.7	14.4
	A-B	-19.5	-15.9	-12.8	-10.3	-9.0	-8.1	-7.4	-4.9

주: 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10〉 산업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사회/개인/ 공공/기타
수도권	A	16.5	15.5	14.2	22.0	24.9	18.1
	B	20.0	18.4	21.4	34.4	26.8	20.2
	A-B	-3.5	-2.9	-7.2	-12.4	-1.9	-2.1
충청권	A	14.6	15.7	13.6	24.9	25.2	16.5
	B	19.6	15.1	18.7	36.7	25.2	16.1
	A-B	-5.0	0.6	-5.1	-11.8	0.0	0.4
호남권	A	19.4	14.3	13.7	24.6	24.3	15.4
	B	20.6	14.9	20.4	36.3	25.2	16.0
	A-B	-1.2	-0.6	-6.7	-11.7	-0.9	-0.6
대경권	A	16.7	13.8	12.3	24.5	23.6	15.7
	B	25.2	15.1	17.6	36.8	25.0	16.5
	A-B	-8.5	-1.3	-5.3	-12.3	-1.4	-0.8
부울경권	A	16.2	13.9	13.5	26.2	23.9	16.6
	B	21.3	15.2	17.6	33.5	24.8	17.1
	A-B	-5.1	-1.3	-4.1	-7.3	-0.9	-0.5
강원 제주권	A	22.5	14.7	11.6	23.5	23.2	15.0
	B	25.9	15.8	16.6	31.4	23.1	14.7
	A-B	-3.4	-1.1	-5.0	-7.9	0.1	0.3
전국	A	18.0	14.9	13.8	23.5	24.5	17.1
	B	22.0	16.6	20.0	34.8	25.8	18.3
	A-B	-4.0	-1.7	-6.2	-11.3	-1.3	-1.2

주: 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10〉은 산업을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변동률을 계산한 결과를 권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 권역에 상관없이, 지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일자

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순일자리 증가율은 건설업 부문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즉 일자리 재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부문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광공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권역의 경우에는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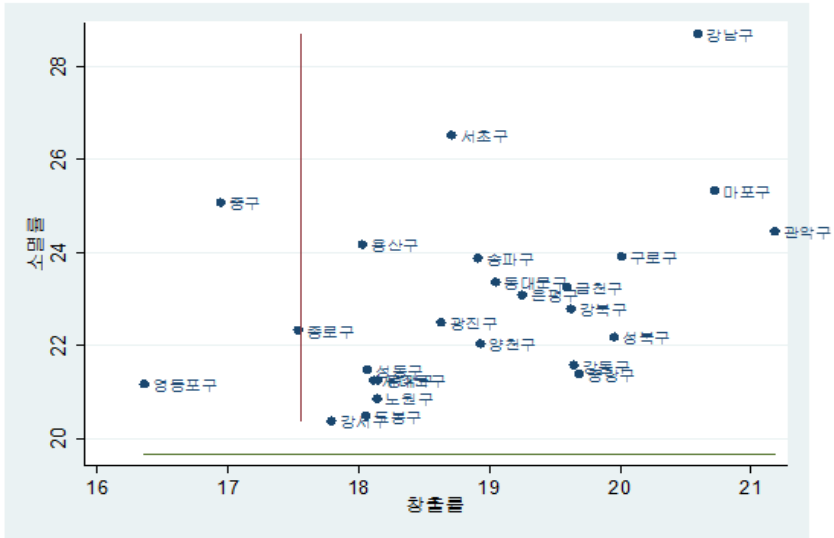
제3절 시군구 단위 일자리 변동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을 지역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였다. 지역고용정책의 주체로서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정책을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수도권 일자리 변동 : 서울·인천·경기

[그림 3-5]는 서울지역의 구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의 일자리 변동률이 1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구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대부분 큰 수준임을 의미한다.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일자리 변동이 있었던 반면, 종로구와 영등포구 등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5] 서울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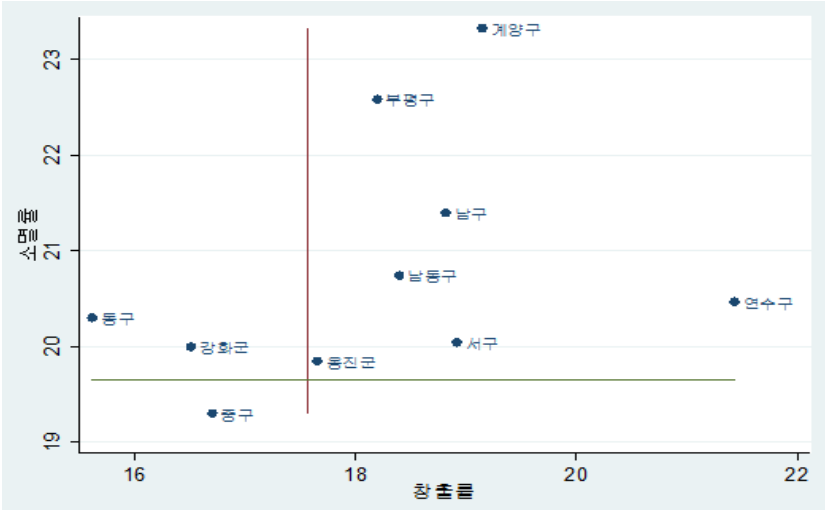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6]은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는 앞선 서울보다 분포가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구 및 동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일자리 변동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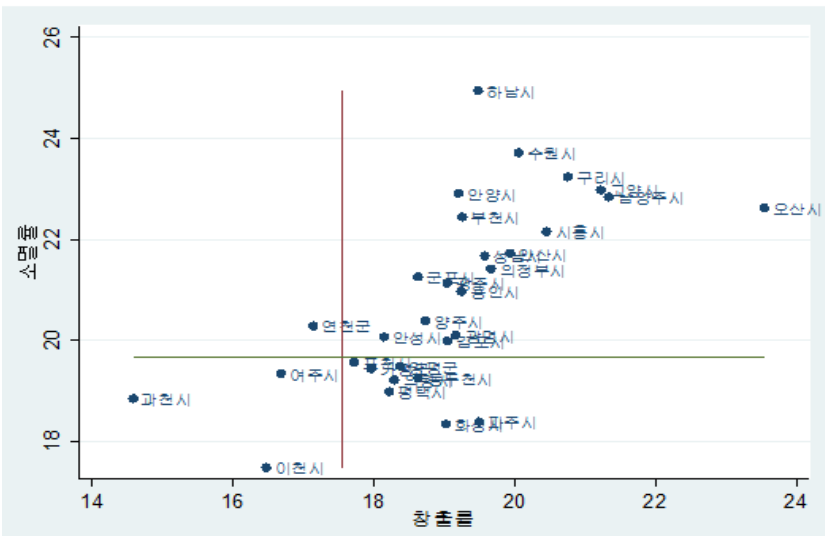
[그림 3-7]은 경기도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 및 하남시, 수원시의 경우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천시, 이천시, 여주시 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역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수준의 일자리 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인 시군이 상당수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인천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7] 경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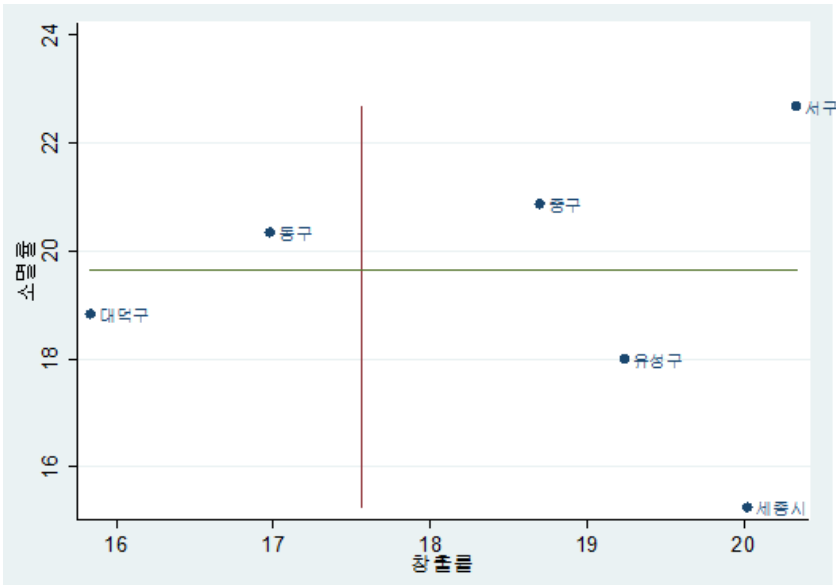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2. 충청권 일자리 변동 : 대전·세종·충북·충남

[그림 3-8]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자리 변동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의 5개 구 중 3개 구(중구, 서구, 유성구)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률이 측정되었다. 이로부터, 중구와 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대덕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안정적 노동시장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8] 대전·세종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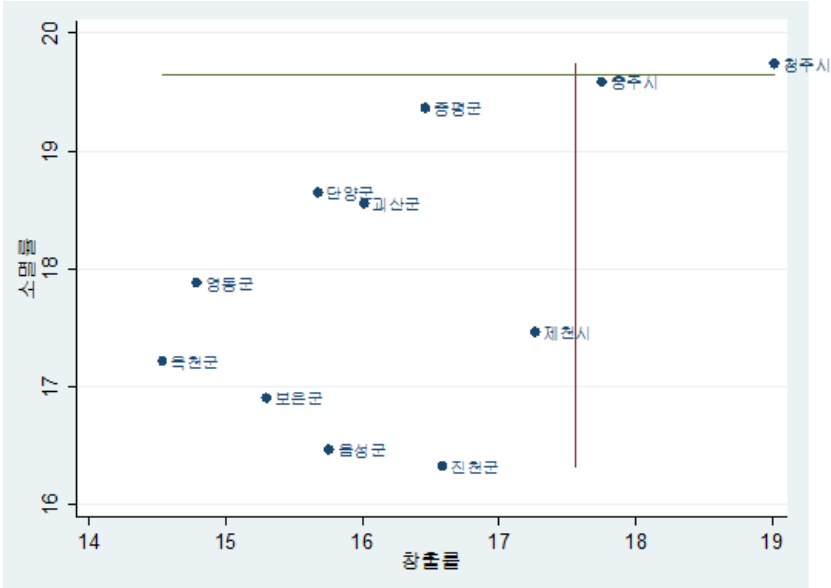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9]는 충청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충청북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다소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림 3-9] 충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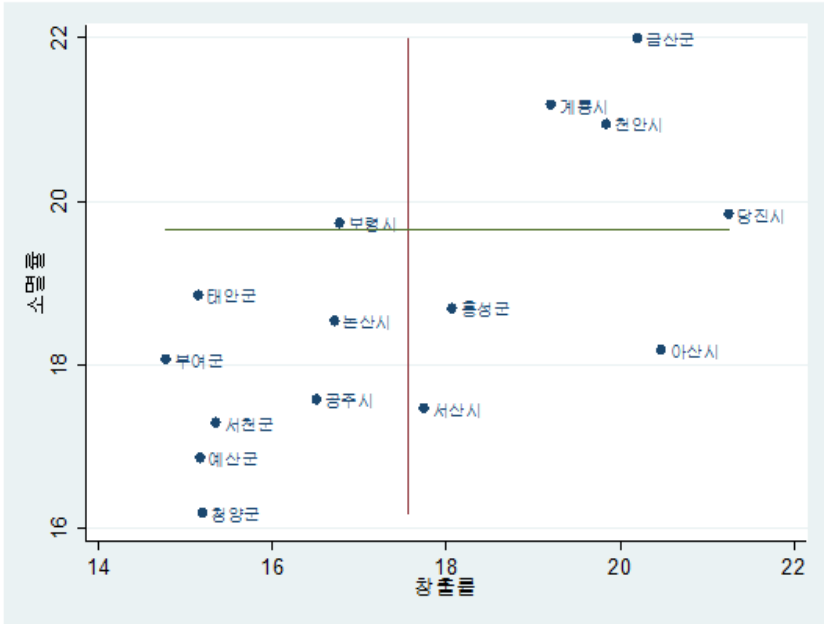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확인되었다. 청주시에서의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옥천군, 보은군, 음성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진천군이며, 일자리 소멸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옥천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을 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은 충청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충청남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당진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 예산군, 서천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률은 당진시에서 가장 높고 부여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금산군에서 가장 높고 청양군에서 가장

[그림 3-10]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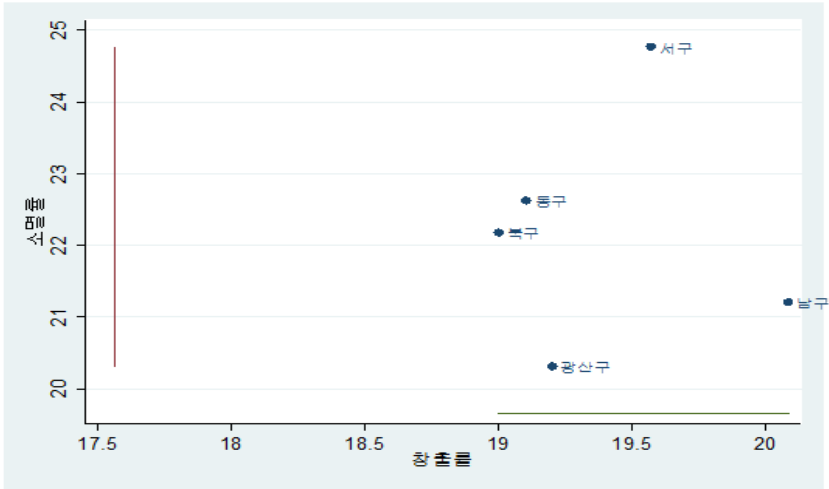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역의 일자리 변동률 수준은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호남권 일자리 변동: 광주·전북·전남

[그림 3-11]은 광주광역시의 구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광주광역시 내 5개 구가 모두 1사분면에 위치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변동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모두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률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수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광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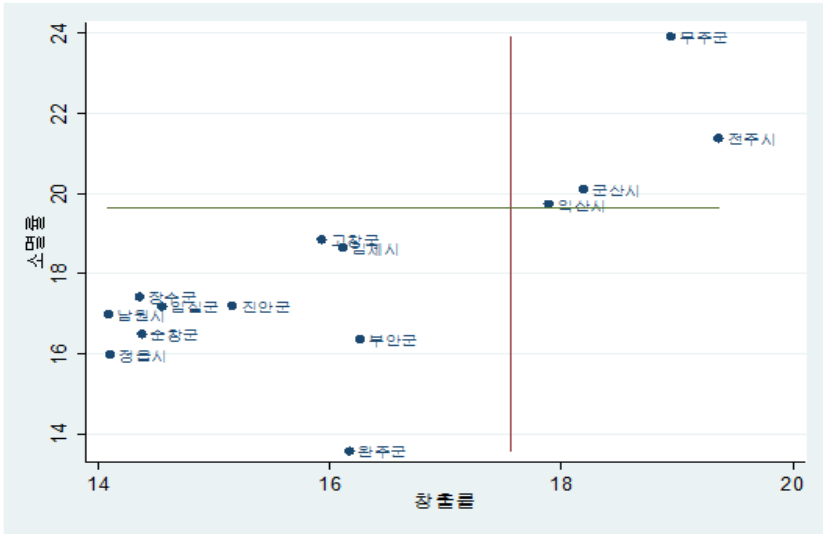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2]는 전라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주군과 전주시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 변동이 발생하는 시군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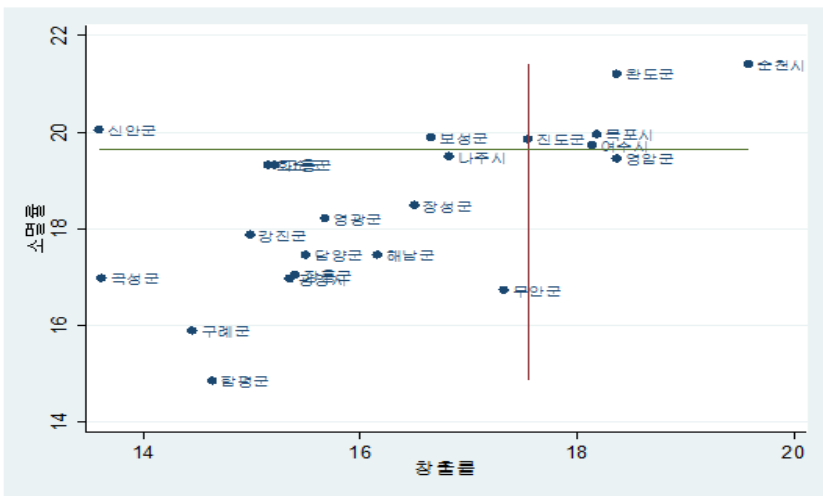
[그림 3-13]은 전라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에 속한 시군 지역들은 상당수가 3사분면(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에 위치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남 지역의 일자리 변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반면, 순천시와 완도군의 경우에는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3] 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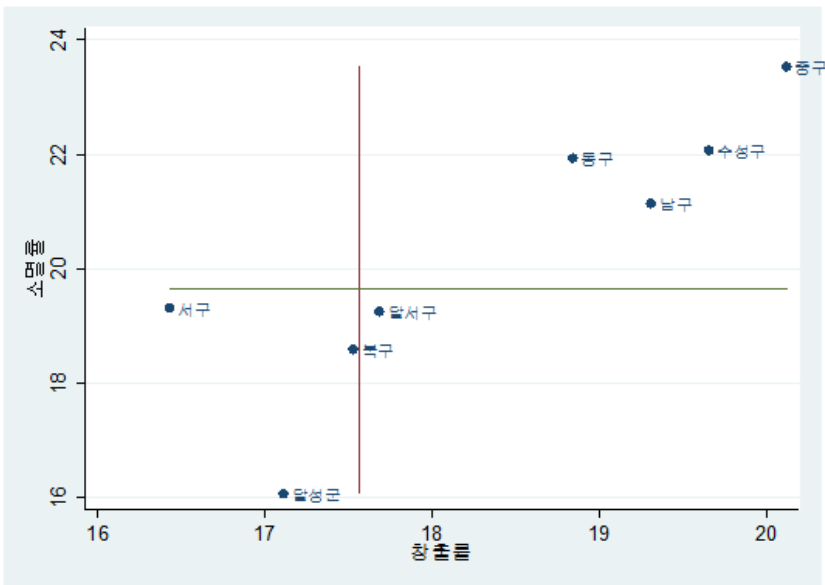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4. 대경권 일자리 변동 : 대구·경북

[그림 3-14]는 대구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수성구 등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달성군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 창출률은 중구에서 가장 높고 서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중구에서 가장 높고 달성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4] 대구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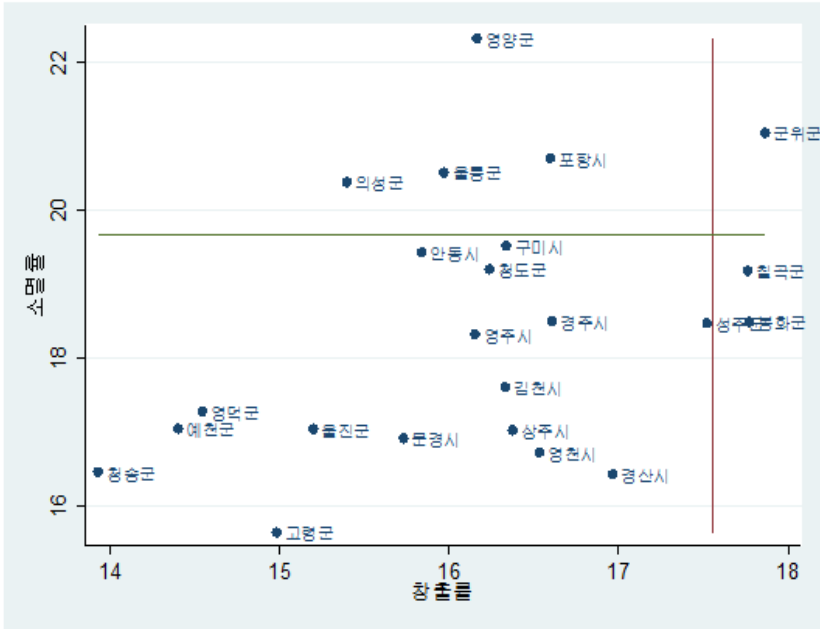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5]는 경상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북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다소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그림 3-15]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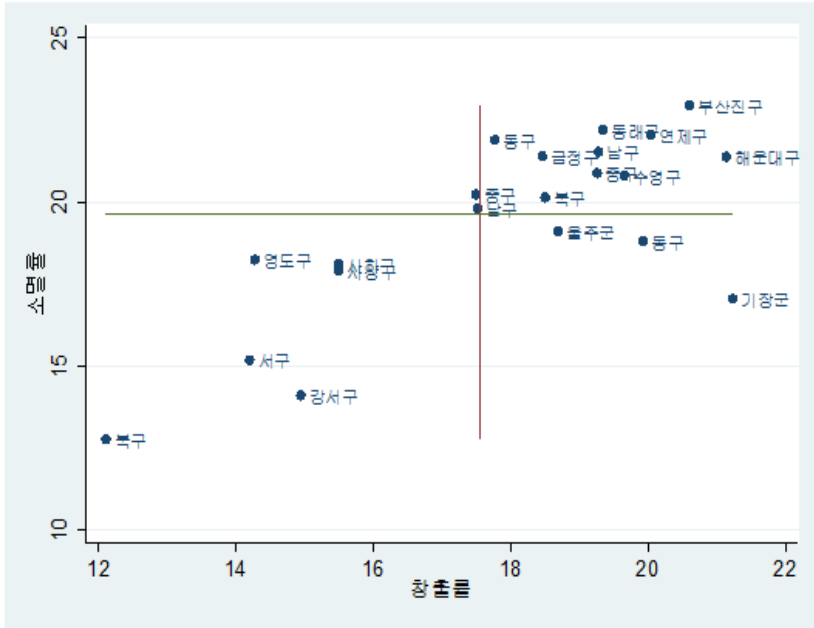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확인되었다. 군위군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한 반면, 청송군, 고령군, 예천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위군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청송군이었으며, 소멸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양군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고령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울경권 일자리 변동 : 부산·울산·경남

[그림 3-16]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사분면보다는 1사분면에 많은 지역이

[그림 3-16] 부산·울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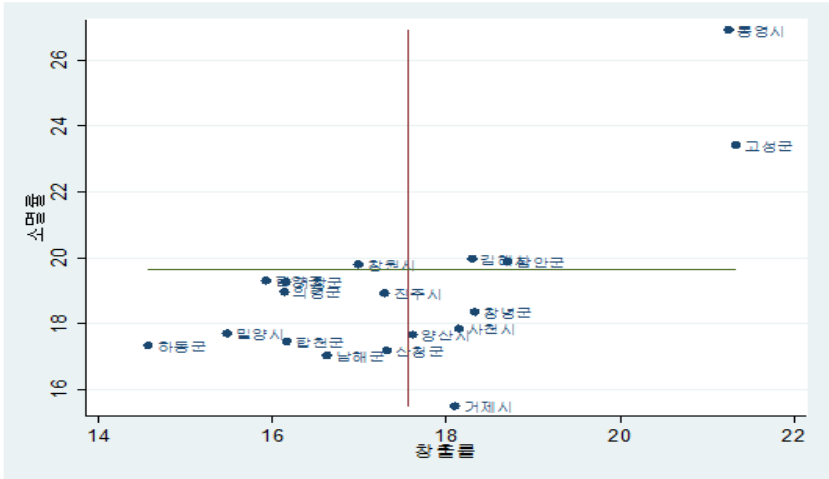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상당히 높은 창출률과 소멸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바, 일자리 변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장군의 경우,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소멸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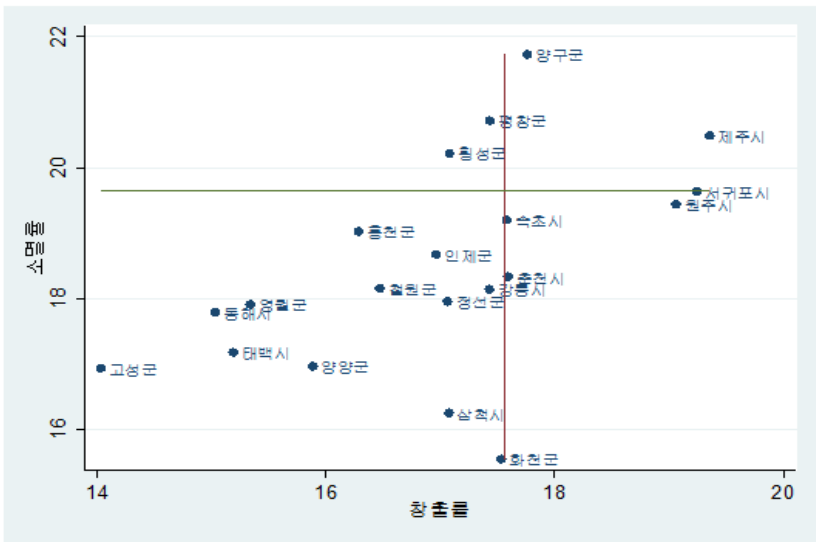
[그림 3-17]은 경상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통영시와 고성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아주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동군, 밀양시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 소멸률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8] 강원·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6. 강원·제주권 일자리 변동 : 강원·제주

[그림 3-18]은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제주도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3사분면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체 수준의 일자리 동학, 즉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17개 광역 시도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세종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광주, 인천, 경북 지역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 변동률 사이에 뚜렷한 정 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석대상을 진입 및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만으로 한정하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일

자리 창출 및 소멸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자리 변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순일자리 증가는 빈약하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한 지역들이 대부분 대도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업을 통한 진입사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입사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단순히 창업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기초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되는 특성이다. 반면,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에 속한 시군구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하회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3-1〉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률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144	20.1	-5.8	19.4	22.4	-3.0	18.4	25.4	-7.0	18.1	21.5	-3.4	17.5	22.3	-4.8
중구	11.4	21.4	-10.1	19.2	27.3	-8.1	17.9	27.7	-9.8	19.3	23.9	-4.5	16.9	25.1	-8.1
용산구	18.0	20.8	-2.8	17.4	27.8	-10.5	19.1	22.1	-3.0	17.6	25.9	-8.3	18.0	24.2	-6.1
성동구	15.3	20.2	-4.9	18.8	20.8	-2.0	19.6	23.0	-3.4	18.5	21.8	-3.4	18.1	21.5	-3.4
광진구	14.9	21.0	-6.1	20.3	21.6	-1.4	20.9	22.3	-1.4	18.4	25.0	-6.7	18.6	22.5	-3.9
동대문구	14.1	17.0	-2.9	20.7	24.7	-4.0	21.0	27.5	-6.5	20.3	24.2	-3.9	19.0	23.4	-4.3
중랑구	15.7	16.7	-1.0	22.0	20.8	1.2	19.7	23.8	-4.1	21.3	24.3	-3.0	19.7	21.4	-1.7
성북구	16.4	17.1	-0.6	22.2	24.2	-2.0	22.7	21.1	1.7	18.5	26.4	-7.9	20.0	22.2	-2.2
강북구	17.3	19.3	-2.0	21.3	23.0	-1.7	20.2	23.2	-3.0	19.8	25.6	-5.9	19.6	22.8	-3.2
도봉구	13.3	17.1	-3.9	18.8	21.3	-2.5	21.6	22.3	-0.7	18.6	21.3	-2.7	18.1	20.5	-2.4
노원구	13.8	17.2	-3.5	18.7	22.7	-4.0	20.5	22.1	-1.6	19.6	21.4	-1.8	18.1	20.9	-2.7
은평구	16.8	19.7	-2.9	21.1	22.6	-1.5	19.9	24.3	-4.4	19.1	25.7	-6.6	19.2	23.1	-3.8
서대문구	13.6	13.5	0.1	21.8	25.8	-4.0	18.5	25.4	-6.9	18.6	20.2	-1.7	18.1	21.3	-3.1
마포구	16.6	24.1	-7.6	25.4	25.7	-0.3	20.7	28.0	-7.3	20.2	23.5	-3.3	20.7	25.3	-4.6
양천구	14.9	20.0	-5.1	19.4	21.7	-2.3	20.5	24.0	-3.5	20.9	22.4	-1.5	18.9	22.0	-3.1
강서구	16.0	18.7	-2.7	19.4	23.5	-4.1	18.5	18.4	0.2	17.2	20.9	-3.7	17.8	20.4	-2.6
구로구	16.9	21.7	-4.9	22.4	21.6	0.8	21.2	25.8	-4.6	19.6	26.6	-7.0	20.0	23.9	-3.9
금천구	20.0	22.1	-2.1	19.6	26.5	-6.9	19.7	22.6	-3.0	19.2	21.8	-2.7	19.6	23.2	-3.7
영등포구	14.1	18.6	-4.5	19.2	21.8	-2.6	16.3	22.9	-6.7	15.9	21.3	-5.4	16.4	21.2	-4.8
동작구	14.9	18.8	-4.0	18.9	23.0	-4.1	22.1	19.1	3.1	16.7	24.1	-7.4	18.1	21.3	-3.1
관악구	18.8	19.0	-0.2	23.9	27.5	-3.7	20.8	26.2	-5.4	21.3	25.2	-3.9	21.2	24.5	-3.3
서초구	17.0	25.7	-8.7	19.3	30.7	-11.4	19.9	26.7	-6.8	18.6	22.9	-4.4	18.7	26.5	-7.8
강남구	17.3	25.8	-8.5	22.8	31.2	-8.4	21.8	30.0	-8.2	20.4	27.8	-7.4	20.6	28.7	-8.1
송파구	15.1	22.3	-7.3	22.0	26.0	-4.0	19.0	25.5	-6.5	19.6	21.7	-2.1	18.9	23.9	-5.0
강동구	16.2	19.0	-2.8	22.2	21.7	0.5	20.6	22.0	-1.4	19.5	23.6	-4.1	19.6	21.6	-1.9
부산광역시															
중구	16.1	16.2	-0.2	18.1	19.5	-1.4	16.0	22.4	-6.4	19.9	22.9	-3.1	17.5	20.2	-2.7
서구	12.5	14.7	-2.2	13.7	15.5	-1.9	14.0	14.8	-0.8	16.6	15.7	0.9	14.2	15.2	-1.0
동구	15.9	20.1	-4.2	20.3	21.3	-1.0	18.1	22.2	-4.1	16.8	24.0	-7.2	17.8	21.9	-4.1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100	200	-100	190	178	1.2	132	175	-43	149	177	-28	143	183	-40
부산진구	192	204	-11	223	227	-0.4	203	239	-36	206	249	-44	206	230	-24
동래구	173	170	0.3	202	217	-1.5	210	248	-38	188	253	-65	193	222	-29
남구	153	175	-22	186	192	-0.6	187	206	-19	175	219	-44	175	198	-23
북구	135	155	-19	212	222	-1.0	191	219	-28	202	210	-0.9	185	202	-16
해운대구	191	171	20	232	226	0.6	226	227	0.0	197	232	-3.5	211	214	-0.2
사하구	125	152	-28	168	173	-0.6	174	195	-21	154	204	-51	155	181	-26
금정구	159	191	-32	212	220	-0.8	180	232	-52	187	213	-26	185	214	-29
강서구	131	120	1.1	160	143	1.8	158	146	1.2	149	156	-0.7	149	141	0.8
연제구	177	180	-0.4	221	215	0.6	206	246	-40	198	241	-43	200	221	-20
수영구	194	160	3.4	195	231	-3.6	197	219	-2.2	200	222	-2.2	197	208	-1.2
사상구	136	153	-1.8	169	183	-1.4	164	191	-27	151	189	-3.9	155	179	-24
기장군	211	129	8.2	193	174	1.9	220	184	3.6	225	195	3.0	212	171	4.2
대구광역시															
중구	172	191	-20	217	223	-0.5	201	267	-66	215	260	-46	201	235	-34
동구	160	175	-15	200	218	-1.8	193	240	-47	201	244	-43	188	219	-31
서구	142	170	-28	174	190	-1.6	176	200	-24	165	212	-47	164	193	-29
남구	163	183	-21	187	227	-3.9	205	208	-0.3	217	228	-1.0	193	212	-18
북구	154	154	0.0	196	194	0.2	180	198	-19	171	198	-26	175	186	-11
수성구	188	187	0.0	204	216	-1.1	208	248	-40	186	232	-46	197	221	-24
달서구	156	162	-0.6	197	198	-0.1	186	193	-0.7	169	218	-49	177	193	-16
달성군	162	139	2.2	170	154	1.6	180	165	1.5	173	184	-1.2	171	161	1.0
인천광역시															
중구	162	169	-0.6	150	190	-4.0	183	227	-43	172	186	-1.4	167	193	-26
동구	181	160	2.2	151	231	-8.0	144	210	-66	148	211	-64	156	203	-47
남구	150	180	-3.0	216	213	0.2	192	245	-53	195	218	-2.2	188	214	-26
연수구	179	180	-0.1	235	210	2.5	242	214	2.8	201	214	-1.3	214	205	1.0
남동구	160	182	-2.2	193	216	-2.3	203	226	-2.3	180	206	-2.6	184	207	-23
부평구	152	199	-4.7	201	22.9	-2.8	203	230	-2.7	172	245	-7.3	182	226	-44
계양구	152	199	-4.7	214	25.6	-4.2	200	238	-3.8	200	240	-41	191	233	-42
서구	173	171	0.3	187	20.2	-1.5	21.7	22.3	-0.6	17.9	20.6	-2.7	18.9	20.0	-1.1
강화군	13.6	17.4	-3.8	18.7	20.4	-1.8	17.0	22.2	-5.1	16.7	20.0	-3.3	16.5	20.0	-3.5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17.9	17.9	0.0	19.3	14.5	4.8	18.7	24.3	-5.6	14.7	22.7	-7.9	17.7	19.8	-2.2
광주광역시															
동구	14.6	20.7	-6.1	21.4	21.2	0.2	20.2	23.0	-2.8	20.2	25.6	-5.5	19.1	22.6	-3.5
서구	16.8	23.2	-6.3	20.4	23.0	-2.7	21.8	25.2	-3.4	19.3	27.7	-8.4	19.6	24.8	-5.2
남구	17.8	18.6	-0.8	19.9	22.8	-2.9	21.2	23.2	-2.0	21.4	20.2	1.2	20.1	21.2	-1.1
북구	14.3	19.5	-5.2	22.1	22.6	-0.5	20.6	23.8	-3.2	19.1	22.8	-3.7	19.0	22.2	-3.2
광산구	16.6	16.4	0.2	21.9	19.5	2.4	20.2	23.2	-3.1	18.1	22.1	-4.0	19.2	20.3	-1.1
대전광역시															
동구	14.6	21.4	-6.8	19.5	20.6	-1.1	17.9	19.6	-1.7	15.9	19.8	-3.9	17.0	20.3	-3.4
중구	16.0	16.9	-0.9	19.7	23.3	-3.6	20.8	23.4	-2.6	18.3	19.9	-1.6	18.7	20.9	-2.2
서구	17.9	19.7	-1.8	21.6	23.7	-2.1	21.8	23.9	-2.0	20.0	23.5	-3.5	20.3	22.7	-2.4
유성구	18.4	15.8	2.6	20.4	18.8	1.5	19.6	19.3	0.2	18.6	18.0	0.6	19.2	18.0	1.2
대덕구	14.7	16.8	-2.1	18.3	21.3	-3.0	16.8	19.7	-2.9	13.5	17.6	-4.1	15.8	18.8	-3.0
울산광역시															
중구	15.2	16.5	-1.4	20.0	22.7	-2.7	21.6	21.3	0.3	20.3	23.1	-2.8	19.3	20.9	-1.6
남구	17.4	18.6	-1.1	20.1	23.5	-3.4	21.3	21.6	-0.3	18.2	22.5	-4.2	19.3	21.5	-2.3
동구	15.5	9.6	5.9	19.0	27.9	-8.8	31.1	16.0	15.1	14.0	21.8	-7.8	19.9	18.8	1.1
북구	10.5	11.1	-0.6	13.8	11.8	2.0	12.5	14.0	-1.5	11.6	14.2	-2.6	12.1	12.8	-0.7
울주군	17.6	17.1	0.5	19.5	19.9	-0.4	18.3	20.8	-2.5	19.4	18.6	0.8	18.7	19.1	-0.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9.5	14.6	4.9	19.2	13.7	5.6	20.4	15.9	4.6	20.9	16.8	4.0	20.0	15.2	4.8
경기도															
수원시	19.4	21.3	-1.9	19.2	28.4	-9.3	21.2	23.8	-2.6	20.5	21.4	-0.9	20.1	23.7	-3.7
성남시	18.4	19.7	-1.3	20.6	22.2	-1.6	21.2	23.0	-1.8	18.0	21.8	-3.7	19.6	21.7	-2.1
의정부시	16.5	17.6	-1.2	21.5	22.3	-0.8	22.2	21.9	0.4	18.5	23.9	-5.4	19.7	21.4	-1.8
안양시	17.6	21.6	-3.9	20.3	24.0	-3.7	20.6	22.7	-2.1	18.3	23.4	-5.1	19.2	22.9	-3.7
부천시	17.1	19.9	-2.8	20.6	22.6	-2.0	20.0	23.8	-3.8	19.4	23.4	-4.0	19.3	22.4	-3.2
광명시	16.3	20.2	-3.9	21.8	19.0	2.8	18.7	20.2	-1.5	19.9	21.0	-1.1	19.2	20.1	-0.9
평택시	17.8	16.6	1.2	18.8	19.3	-0.5	19.1	19.0	0.1	17.2	21.0	-3.8	18.2	19.0	-0.8
동두천시	17.8	16.1	1.7	19.9	20.6	-0.7	19.3	20.7	-1.4	17.6	19.7	-2.1	18.6	19.3	-0.6
안산시	17.2	17.1	0.0	22.2	22.0	0.2	21.9	24.3	-2.5	18.5	23.4	-4.9	19.9	21.7	-1.8
고양시	19.2	20.0	-0.9	22.4	24.4	-2.0	21.3	24.4	-3.0	21.9	23.1	-1.2	21.2	23.0	-1.8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경기도															
과천시	140	149	-0.9	155	207	-51	163	203	-3.9	125	195	-7.0	146	188	-43
구리시	167	211	-44	240	234	0.6	220	245	-24	202	240	-3.7	208	232	-25
남양주시	172	190	-1.7	226	229	-0.3	238	244	-0.7	218	251	-3.3	213	228	-15
오산시	194	193	0.1	254	234	2.0	276	228	4.8	218	250	-3.3	235	226	0.9
시흥시	181	184	-0.3	214	208	0.6	206	255	-4.9	217	239	-2.2	205	222	-1.7
군포시	174	202	-2.8	192	223	-3.1	195	215	-2.0	184	211	-2.7	186	213	-26
의왕시	165	165	0.0	190	212	-2.2	194	176	1.8	183	215	-3.2	183	192	-0.9
하남시	158	222	-6.4	209	261	-5.3	226	250	-2.4	186	264	-7.8	195	249	-55
용인시	172	220	-4.8	199	217	-1.8	196	196	0.0	203	206	-0.3	192	210	-1.7
파주시	244	159	8.5	189	181	0.8	180	210	-3.0	166	186	-2.0	195	184	1.1
이천시	151	140	1.1	171	181	-1.0	174	181	-0.7	163	197	-3.4	165	175	-1.0
안성시	184	171	1.2	177	211	-3.3	191	199	-0.8	174	222	-4.8	181	201	-1.9
김포시	162	184	-2.3	194	197	-0.3	202	204	-0.2	204	214	-1.0	190	200	-0.9
화성시	185	189	-0.4	197	183	1.4	184	181	0.2	195	180	1.4	190	183	0.7
광주시	148	199	-5.2	208	200	0.7	200	241	-4.1	207	205	0.2	190	211	-2.1
양주시	154	182	-2.8	197	205	-0.8	202	225	-2.4	197	204	-0.7	187	204	-1.7
포천시	165	179	-1.4	181	188	-0.7	187	208	-2.1	176	208	-3.2	177	196	-1.8
여주시	169	147	2.2	152	240	-8.7	177	186	-0.9	170	202	-3.2	167	193	-2.7
연천군	143	228	-8.5	189	177	1.2	196	192	0.4	158	214	-5.7	171	203	-3.1
가평군	144	170	-2.6	201	197	0.5	196	211	-1.5	177	200	-2.3	180	194	-1.5
양평군	146	142	0.3	185	206	-2.2	226	190	3.6	179	241	-6.2	184	195	-1.1
강원도															
춘천시	173	172	0.1	173	192	-1.8	181	175	0.6	177	195	-1.8	176	183	-0.7
원주시	181	184	-0.2	202	221	-1.9	198	179	1.9	181	194	-1.3	191	194	-0.4
강릉시	147	146	0.1	204	197	0.8	183	171	1.2	163	212	-4.9	174	181	-0.7
동해시	135	160	-2.5	164	182	-1.9	150	178	-2.8	153	191	-3.9	150	178	-2.8
태백시	119	152	-3.3	168	170	-0.2	161	159	0.2	160	205	-4.6	152	172	-2.0
속초시	136	166	-3.0	197	208	-1.1	191	204	-1.3	180	190	-1.1	176	192	-1.6
삼척시	131	129	0.2	200	167	3.3	187	170	1.7	165	183	-1.8	171	162	0.8
홍천군	120	188	-6.8	173	198	-2.5	201	180	2.1	157	194	-3.8	163	190	-2.7
횡성군	152	197	-4.5	250	179	7.2	134	208	-7.3	147	225	-7.9	171	202	-3.1
영월군	135	185	-5.1	165	164	0.2	174	162	1.2	139	205	-6.7	153	179	-2.6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강원도															
평창군	18.1	20.8	-2.7	19.5	19.8	-0.3	17.4	22.5	-5.1	14.7	19.7	-5.1	17.4	20.7	-3.3
정선군	14.2	23.2	-8.9	20.5	15.3	5.3	21.2	19.4	1.8	12.2	14.0	-1.7	17.1	18.0	-0.9
철원군	15.6	14.9	0.7	17.8	17.2	0.5	16.7	19.5	-2.8	15.8	21.0	-5.2	16.5	18.2	-1.7
화천군	15.1	14.8	0.3	17.2	14.9	2.4	22.2	17.1	5.1	15.6	15.4	0.2	17.5	15.5	2.0
양구군	18.3	24.0	-5.7	18.2	24.0	-5.7	18.3	18.6	-0.3	16.3	20.4	-4.2	17.8	21.7	-4.0
인제군	11.5	17.0	-5.5	18.6	18.4	0.2	19.7	18.8	0.9	18.1	20.4	-2.4	17.0	18.7	-1.7
고성군	10.6	18.1	-7.5	14.6	17.8	-3.2	18.2	14.2	4.0	12.7	17.6	-4.9	14.0	16.9	-2.9
양양군	13.7	16.3	-2.6	15.2	18.1	-2.9	20.0	14.4	5.7	14.6	19.1	-4.5	15.9	17.0	-1.1
충청북도															
청주시	17.0	17.4	-0.5	21.1	19.7	1.5	19.0	20.9	-1.9	19.0	21.0	-2.0	19.0	19.7	-0.7
충주시	17.5	17.1	0.4	17.0	20.6	-3.6	18.4	20.1	-1.7	18.1	20.6	-2.5	17.8	19.6	-1.8
제천시	15.0	16.4	-1.4	19.2	17.5	1.6	17.9	17.5	0.4	17.0	18.4	-1.4	17.3	17.5	-0.2
보은군	14.0	18.5	-4.5	17.6	16.7	1.0	15.5	15.6	-0.1	14.1	16.9	-2.8	15.3	16.9	-1.6
옥천군	10.8	13.0	-2.2	16.0	19.2	-3.2	16.0	19.1	-3.1	15.4	17.6	-2.2	14.5	17.2	-2.7
영동군	13.1	16.2	-3.2	15.2	18.7	-3.5	15.4	17.9	-2.5	15.5	18.7	-3.3	14.8	17.9	-3.1
진천군	16.2	12.2	4.0	16.6	17.7	-1.1	15.2	17.9	-2.7	18.3	17.5	0.8	16.6	16.3	0.3
괴산군	16.6	19.0	-2.5	15.0	18.3	-3.3	15.9	18.9	-3.0	16.6	18.0	-1.5	16.0	18.6	-2.5
음성군	13.2	17.5	-4.3	17.6	16.7	0.9	17.4	15.7	1.7	14.8	15.9	-1.1	15.8	16.5	-0.7
단양군	12.8	22.3	-9.5	16.2	16.9	-0.7	16.8	19.0	-2.2	16.9	16.3	0.6	15.7	18.6	-3.0
증평군	14.5	17.7	-3.2	19.7	18.7	1.0	16.7	22.5	-5.8	14.9	18.6	-3.7	16.5	19.4	-2.9
충청남도															
천안시	16.3	16.7	-0.4	22.1	23.9	-1.8	22.1	20.7	1.4	18.8	22.5	-3.7	19.8	20.9	-1.1
공주시	14.0	15.7	-1.7	18.9	17.1	1.7	17.0	17.6	-0.7	16.2	19.9	-3.7	16.5	17.6	-1.1
보령시	12.1	15.2	-3.1	18.3	18.5	-0.3	19.7	21.8	-2.1	17.0	23.4	-6.4	16.8	19.7	-3.0
아산시	21.4	12.1	9.3	24.9	28.6	-3.7	18.4	16.3	2.0	17.3	15.7	1.5	20.5	18.2	2.3
서산시	18.9	15.5	3.4	18.1	16.6	1.5	17.3	19.0	-1.7	16.7	18.8	-2.1	17.7	17.5	0.3
논산시	13.7	13.7	0.0	17.6	19.5	-1.9	16.5	22.0	-5.4	19.1	19.0	0.0	16.7	18.5	-1.8
계룡시	15.3	18.0	-2.7	20.1	23.7	-3.6	24.1	23.6	0.5	17.3	19.5	-2.2	19.2	21.2	-2.0
당진시	21.7	15.0	6.7	20.6	18.0	2.6	20.1	23.4	-3.3	22.7	23.0	-0.4	21.2	19.8	1.4
금산군	15.6	13.3	2.3	33.1	30.1	3.0	15.6	24.6	-9.0	16.5	20.0	-3.5	20.2	22.0	-1.8
부여군	11.8	18.3	-6.5	16.5	17.4	-1.0	17.5	16.8	0.7	13.3	19.7	-6.5	14.8	18.1	-3.3
서천군	16.5	13.7	2.8	16.5	18.8	-2.3	14.2	18.7	-4.4	14.1	18.0	-3.9	15.3	17.3	-1.9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충청남도															
청양군	10.9	14.9	-4.0	16.5	15.7	0.7	18.4	15.5	2.8	15.0	18.5	-3.5	15.2	16.2	-1.0
홍성군	16.7	18.1	-1.4	18.9	18.1	0.9	18.6	20.7	-2.1	18.0	17.9	0.1	18.1	18.7	-0.6
예산군	12.6	16.0	-3.4	16.8	16.6	0.2	16.0	17.5	-1.6	15.2	17.3	-2.1	15.2	16.9	-1.7
태안군	10.7	11.9	-1.2	15.7	21.3	-5.7	17.8	20.1	-2.3	16.4	22.1	-5.7	15.1	18.9	-3.7
전라북도															
전주시	14.9	16.7	-1.8	21.4	21.9	-0.5	21.2	23.2	-2.0	19.8	23.8	-3.9	19.4	21.4	-2.0
군산시	16.4	15.5	0.8	19.1	22.0	-2.9	19.2	21.1	-1.9	18.1	21.8	-3.7	18.2	20.1	-1.9
익산시	15.9	16.9	-1.1	18.4	20.3	-1.9	19.4	19.3	0.1	17.9	22.4	-4.5	17.9	19.7	-1.8
정읍시	11.8	14.7	-2.9	14.8	16.3	-1.6	15.3	17.5	-2.2	14.5	15.4	-0.9	14.1	16.0	-1.9
남원시	11.8	14.4	-2.7	14.1	19.1	-5.0	16.9	15.6	1.2	13.6	18.9	-5.3	14.1	17.0	-2.9
김제시	12.6	15.7	-3.1	18.8	18.3	0.5	17.9	21.1	-3.2	15.2	19.6	-4.4	16.1	18.7	-2.5
완주군	11.7	11.4	0.3	17.7	13.4	4.3	19.2	16.2	3.0	16.0	13.2	2.8	16.2	13.6	2.6
진안군	14.6	14.8	-0.2	13.1	18.4	-5.3	16.6	15.1	1.5	16.4	20.5	-4.1	15.2	17.2	-2.0
무주군	18.0	20.6	-2.7	21.8	21.5	0.2	17.8	23.8	-6.0	18.2	29.7	-11.5	18.9	23.9	-5.0
장수군	12.8	19.4	-6.7	16.2	18.0	-1.8	13.9	17.6	-3.7	14.5	14.6	-0.1	14.4	17.4	-3.1
임실군	9.5	18.3	-8.8	17.0	12.8	4.2	15.1	20.1	-5.0	16.6	17.5	-0.9	14.5	17.2	-2.6
순창군	11.6	13.2	-1.7	14.6	20.5	-5.9	15.7	17.0	-1.3	15.6	15.3	0.3	14.4	16.5	-2.1
고창군	13.4	17.7	-4.4	18.6	22.0	-3.4	15.9	16.8	-0.9	15.9	18.9	-3.1	15.9	18.9	-2.9
부안군	15.2	13.5	1.7	17.0	15.5	1.5	18.2	16.5	1.6	14.7	20.0	-5.4	16.3	16.4	-0.1
전라남도															
목포시	15.7	15.7	0.0	20.0	22.1	-2.1	18.6	21.2	-2.5	18.4	20.8	-2.4	18.2	20.0	-1.8
여수시	15.2	16.8	-1.6	19.8	21.4	-1.6	18.8	20.4	-1.6	18.8	20.4	-1.6	18.1	19.7	-1.6
순천시	15.6	19.5	-3.9	23.3	19.6	3.7	21.2	22.4	-1.2	18.3	24.2	-5.9	19.6	21.4	-1.8
나주시	12.2	19.3	-7.1	16.4	18.7	-2.3	18.5	20.5	-2.0	20.2	19.4	0.7	16.8	19.5	-2.7
광양시	15.0	14.3	0.7	14.9	18.4	-3.4	16.2	16.7	-0.5	15.3	18.6	-3.2	15.3	17.0	-1.6
담양군	9.6	11.5	-1.9	16.7	16.9	-0.2	17.3	17.3	0.0	18.4	24.1	-5.7	15.5	17.5	-2.0
곡성군	11.0	14.0	-3.0	14.6	19.0	-4.4	14.5	16.0	-1.5	14.3	19.0	-4.6	13.6	17.0	-3.4
구례군	15.3	14.0	1.3	13.6	16.8	-3.2	14.6	16.2	-1.6	14.3	16.5	-2.3	14.4	15.9	-1.4
고흥군	15.9	16.6	-0.8	16.5	17.3	-0.8	14.3	23.3	-9.0	14.2	20.0	-5.9	15.2	19.3	-4.1
보성군	14.4	13.5	0.9	19.0	21.3	-2.3	16.0	24.8	-8.8	17.2	19.9	-2.7	16.7	19.9	-3.2
화순군	11.9	18.9	-7.0	17.2	19.1	-1.9	17.3	19.0	-1.7	14.2	20.3	-6.1	15.1	19.3	-4.2
장흥군	10.2	14.3	-4.1	18.1	16.3	1.8	18.2	18.5	-0.3	15.1	19.0	-4.0	15.4	17.0	-1.7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전라남도															
강진군	109	117	-0.8	166	199	-3.4	193	186	0.7	132	213	-8.1	150	179	-2.9
해남군	11.6	10.1	1.4	160	198	-3.8	16.1	20.0	-3.9	21.0	20.0	1.0	16.2	17.5	-1.3
영암군	17.3	14.5	2.8	17.4	20.4	-3.1	19.2	22.6	-3.4	19.6	20.3	-0.7	18.4	19.5	-1.1
무안군	13.6	14.0	-0.5	16.7	18.6	-1.9	21.1	17.8	3.4	17.9	16.5	1.3	17.3	16.7	0.6
함평군	13.1	11.4	1.7	12.9	17.1	-4.2	17.4	13.8	3.6	15.2	17.2	-2.0	14.6	14.9	-0.2
영광군	13.2	12.1	1.1	16.3	16.1	0.2	13.8	22.1	-8.3	19.3	22.6	-3.2	15.7	18.2	-2.5
장성군	14.3	16.7	-2.4	20.5	17.6	2.9	15.3	16.0	-0.7	15.9	23.7	-7.8	16.5	18.5	-2.0
완도군	19.8	20.0	-0.1	16.1	21.1	-5.1	18.9	19.2	-0.2	18.6	24.6	-6.0	18.4	21.2	-2.8
진도군	15.6	17.5	-1.9	12.9	25.8	-12.9	21.7	17.1	4.6	20.0	19.0	1.0	17.5	19.9	-2.3
신안군	13.0	21.1	-8.1	15.1	19.7	-4.6	13.4	20.6	-7.2	12.8	18.9	-6.1	13.6	20.1	-6.5
경상북도															
포항시	14.2	18.2	-4.0	17.6	21.0	-3.4	17.4	21.6	-4.1	17.1	22.0	-4.9	16.6	20.7	-4.1
경주시	14.4	14.7	-0.3	17.7	19.8	-2.1	17.7	19.0	-1.3	16.7	20.5	-3.9	16.6	18.5	-1.9
김천시	12.6	15.9	-3.3	17.3	18.4	-1.1	18.3	17.5	0.8	17.1	18.6	-1.6	16.3	17.6	-1.3
안동시	13.6	15.9	-2.3	15.4	21.8	-6.3	17.5	19.8	-2.2	16.8	20.3	-3.5	15.8	19.4	-3.6
구미시	16.0	18.2	-2.1	16.1	19.3	-3.2	17.0	19.1	-2.1	16.2	21.5	-5.3	16.3	19.5	-3.2
영주시	11.5	14.7	-3.2	18.5	18.1	0.3	18.2	20.8	-2.6	16.5	19.7	-3.2	16.2	18.3	-2.2
영천시	13.4	14.6	-1.1	18.3	16.3	2.0	18.5	18.3	0.2	15.9	17.7	-1.8	16.5	16.7	-0.2
상주시	17.2	11.8	5.5	15.5	19.6	-4.1	17.8	19.5	-1.7	15.0	17.2	-2.2	16.4	17.0	-0.7
문경시	13.3	14.1	-0.8	16.5	15.5	0.9	14.7	20.4	-5.7	18.5	17.7	0.8	15.7	16.9	-1.2
경산시	13.5	14.9	-1.5	19.4	15.6	3.7	19.1	17.1	2.0	15.9	18.0	-2.1	17.0	16.4	0.5
군위군	14.0	19.8	-5.8	20.3	18.0	2.3	20.0	19.7	0.3	17.2	26.7	-9.6	17.9	21.0	-3.2
의성군	13.2	16.1	-2.9	16.2	23.8	-7.6	16.7	21.9	-5.2	15.5	19.7	-4.2	15.4	20.4	-5.0
청송군	13.4	16.4	-3.0	17.5	13.8	3.7	13.6	15.1	-1.5	11.2	20.5	-9.3	13.9	16.5	-2.5
영양군	12.0	22.6	-10.6	17.1	17.4	-0.3	25.1	13.9	11.2	10.5	35.4	-24.9	16.2	22.3	-6.2
영덕군	12.0	13.8	-1.7	14.7	20.1	-5.5	15.9	18.0	-2.1	15.6	17.2	-1.6	14.5	17.3	-2.7
청도군	10.9	17.2	-6.3	18.9	19.5	-0.6	17.8	18.8	-1.1	17.4	21.3	-3.9	16.2	19.2	-3.0
고령군	10.5	12.7	-2.1	16.1	16.9	-0.8	17.4	15.9	1.5	15.8	17.1	-1.3	15.0	15.6	-0.7
성주군	10.1	12.1	-2.0	18.4	21.2	-2.8	20.4	18.8	1.6	21.2	21.8	-0.6	17.5	18.5	-0.9
칠곡군	15.0	17.6	-2.6	18.6	19.3	-0.7	19.5	19.4	0.1	17.9	20.4	-2.4	17.8	19.2	-1.4
예천군	10.6	15.3	-4.6	15.6	16.9	-1.3	15.7	17.1	-1.4	15.7	18.9	-3.3	14.4	17.0	-2.6
봉화군	14.6	16.4	-1.8	21.4	16.4	5.0	19.7	18.7	1.0	15.4	22.4	-7.1	17.8	18.5	-0.7

〈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경상북도															
울진군	10.3	13.2	-2.9	16.8	15.5	1.3	17.7	17.7	0.0	16.0	21.8	-5.8	15.2	17.0	-1.8
울릉군	9.7	16.3	-6.6	16.9	19.2	-2.2	21.3	16.9	4.4	16.0	29.7	-13.7	16.0	20.5	-4.5
경상남도															
진주시	14.4	16.0	-1.6	19.3	18.6	0.7	17.6	21.5	-3.9	17.9	19.6	-1.7	17.3	18.9	-1.6
통영시	16.4	20.0	-3.6	29.8	26.0	3.8	18.3	36.7	-18.5	20.5	24.9	-4.4	21.2	26.9	-5.7
사천시	15.1	13.1	2.0	20.9	18.9	1.9	19.3	18.8	0.5	17.3	20.5	-3.3	18.1	17.9	0.3
김해시	16.0	16.6	-0.6	19.3	20.7	-1.4	19.7	20.8	-1.1	18.2	21.7	-3.5	18.3	20.0	-1.7
밀양시	11.8	14.0	-2.2	18.1	18.6	-0.5	16.3	20.2	-3.9	15.7	18.0	-2.3	15.5	17.7	-2.2
거제시	13.6	12.8	0.7	18.7	16.6	2.1	20.0	17.9	2.1	20.1	14.6	5.5	18.1	15.5	2.6
양산시	15.6	14.9	0.7	18.9	17.8	1.2	17.0	20.0	-3.0	18.9	18.0	0.9	17.6	17.7	-0.1
창원시	15.8	17.8	-2.0	18.2	19.9	-1.8	17.7	20.5	-2.8	16.3	21.0	-4.7	17.0	19.8	-2.8
의령군	15.3	17.6	-2.2	18.7	16.0	2.6	16.1	19.5	-3.4	14.4	22.7	-8.3	16.1	19.0	-2.8
함안군	16.6	13.9	2.7	19.8	20.9	-1.1	19.4	21.9	-2.6	19.0	22.8	-3.8	18.7	19.9	-1.2
창녕군	13.3	16.8	-3.5	22.5	20.0	2.5	19.1	18.4	0.7	18.5	18.2	0.2	18.3	18.4	0.0
고성군	19.7	15.3	4.4	21.1	25.1	-4.0	22.2	26.6	-4.4	22.3	26.6	-4.4	21.3	23.4	-2.1
남해군	15.6	15.2	0.5	17.6	16.2	1.5	17.2	17.8	-0.6	16.0	19.1	-3.0	16.6	17.0	-0.4
하동군	10.5	13.7	-3.2	16.4	17.5	-1.1	16.7	21.1	-4.4	14.7	17.1	-2.4	14.6	17.3	-2.8
산청군	11.1	16.1	-4.9	18.6	17.2	1.4	17.3	17.2	0.1	22.3	18.2	4.0	17.3	17.2	0.1
함양군	14.4	17.6	-3.2	16.6	19.7	-3.1	17.5	22.0	-4.4	15.2	18.0	-2.8	15.9	19.3	-3.4
거창군	15.8	19.4	-3.6	16.6	21.2	-4.7	17.2	18.7	-1.6	15.1	17.7	-2.6	16.2	19.3	-3.1
합천군	12.4	13.7	-1.3	18.2	16.5	1.7	17.6	18.8	-1.1	16.4	20.9	-4.5	16.2	17.5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4.4	18.6	-4.2	19.8	21.0	-1.2	22.8	20.2	2.6	20.4	22.2	-1.8	19.4	20.5	-1.1
서귀포시	16.8	17.5	-0.7	20.3	18.9	1.4	21.7	21.5	0.2	18.3	20.7	-2.4	19.2	19.6	-0.4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
(<https://mdis.kostat.go.kr>).

제 4 장

지역별 일자리 창출요인 분석 :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을 중심으로⁵⁾

제1절 문제제기

경기변동이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시장정책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고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한 거시경제적인 고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한 국가의 기본적인 고용구조, 노동시장 지원제고, 고용주 및 기업의 개별적 특성 등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규모나 업력과 같은 개별 기업 및 사업체의 특성이 고용창출의 패턴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요인인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기업동학과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주목받아왔다(Birch, 1979, 1981, 1987; Davis et al., 1996; Neumark et al., 2011; Haltiwanger et al., 2013; Ayyagari et al., 2014).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규모와 업력에 따라 분류한 다음,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의 고용창출 및 소멸의 구조, 이를 통한 고용증가가 주로 어떠한 규모-업력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5) 본 장의 분석은 Cho et al.(2016)의 분석방법을 차용하여 수행되었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의 기본 관측단위인 사업체를 기반으로 규모 및 업력과 고용창출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체의 시장 진입을 통한 고용창출이 여전히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간 생산활동 및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사업체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제2절 선행연구

1. 기업동학과 고용창출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이나 기존 사업체의 퇴출이 고용구조 변동에 있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업체 혹은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창출 및 소멸과 같은 일자리 재분배 과정의 많은 비중이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 정도를 차지하는 진입 및 퇴출사업체들이 전체 고용변동량의 약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고용변동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입 및 퇴출사업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산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은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나 경제 내의 생산성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진희(2003)는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1998년 동안의 사업체 진입 및 퇴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증

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제조업 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약 45~65%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바, 이재형(2011)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을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8~2009년 동안 영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비율로 진입하는 반면, 평균 수준보다 높은 비율로 퇴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진입 및 퇴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 규모(Size)와 업력(Age)에 따른 고용창출

실제로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동과 기업동학의 밀접한 관계에는 규모나 업력과 같은 사업체의 개별적인 특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업체의 성장과 규모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Gibrat(1931)의 기업성장모형이나 규모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업력이 길어질수록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Jovanovic(1982)의 기업성장모형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그러한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매출이나 고용의 증가로 정의된 성장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Davis et al.(1996)은 사업체가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통계적 오류와 측정의 오류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과대평가됨으로써 도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적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용창출 이론의 중요한 두 개념인 순고용창출과 총고용창출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으로의 회귀문제 또는 경기변동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규모분류 방법으로 인한 편의의 발생 및 통계적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규모와 고용창출 사이

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해석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속한 두 기간의 고용량의 평균값을 변동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분류방식이 각광을 받았다. Friedman (1992)은 이러한 규모분류법과 미국의 제조업 자료를 활용하여 1972~1988년 동안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에서 전체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절반 이상이 설명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이 높은 수준에서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비교적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대한 연구에서 쟁점이었던 규모의 측정과 평균으로의 회귀와 같은 측정방식에 의한 통계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합한 자료 및 측정법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체의 규모만이 일자리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고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Haltiwanger et al.(2013)은 순일자리 증가율과 사업체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규모 뿐만 아니라 업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력을 통제할 경우 순일자리 증가율과 규모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창업기업 또는 업력이 길지 않은 사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 의해 도출된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음(-)의 관계와 소규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결론들은 업력이 통제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된 결과이며, 업력이 통제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의 중요성은 곧 창업 또는 짧은 업력의 ‘젊은’ 사업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진입사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자리 소멸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함께 언급하였다.

3. 한국의 사업체 분포와 고용창출

사업체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분포와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업체의 규모 분포가, 소위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대기업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이 규모 및 업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김현경·윤영희(2011)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수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로 분류되는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사업체 분포 특징은 단순히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허식 외(2012)는 2000~2010년 동안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조사된 창업(진입)사업체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및 그들의 생존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창업사업체의 수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48.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의 평균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57%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국 사업체의 특징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규모별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가 갖는 중요성이 과연 한국에서도 여전히 확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으로 많은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변동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전병유·김혜원(2003)의 연구이다. 그들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81년부터 2000년까지 ICT 분야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소멸이 지속, 진입, 소멸사업체와 같은 사업체의 동학적 변화 양상과 규모, 수명, 임금수준과 같은 사업체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분포가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밀집되어

있음은 물론,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는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고용변동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에 대한 분석과 규모별 고용창출·소멸 및 순일자리 증가율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20인 미만 사업체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가 높은 순일자리 증가율을 보이고, 동시에 낮은 일자리 창출률에 수반되는 낮은 일자리 소멸률로 인해 일자리 재배치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고용을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국내의 연구들은 광공업통계조사와 같은 제조업 자료에 국한되거나 전 산업에 걸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산업 간 비교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사업체의 전반적인 일자리 변동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역별로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바, 일자리 변동의 양상 및 사업체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체 종사자 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별도로 제공받은 사업체 ID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존속 여부, 그리

고 일자리(종사자 수)의 증가(창출) 및 감소(소멸) 등을 측정하였다.

사업체 수준에서의 규모는 t 기와 $t-1$ 기의 종사자 수 평균을 이용하였다. 이는 일자리 변동량을 계산하는 두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와 퇴출되는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체의 업력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 중 하나인 설립연도를 이용하였다.⁶⁾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활용될 규모와 업력의 집단은 총 8개의 규모집단(5인 미만/5인 이상 10인 미만/10인 이상 20인 미만/20인 이상 50인 미만/50인 이상 100인 미만/100인 이상 300인 미만/300인 이상 500인 미만/500인 이상)과 총 9개의 업력집단(생성(0년)/1~2년/3~4년/5~6년/7~8년/9~10년/11~12년/13~15년/16년 이상)을 활용하였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규모와 업력이 해당 사업체의 고용창출과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동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Haltiwanger et al.(2013)에서 사용한 완전포화회귀모형(fully saturated regression model)을 실증분석모형으로 사용하였다.

$$JGR_{est} = \alpha + \sum_{j=1}^7 \beta_j \times size_{j,est} + \sum_{k=1}^8 \delta_k \times age_{k,est} + \Gamma X + \varepsilon_{est}$$

사업체의 규모 및 업력 이외의 통제변수로는 산업분류와 지역, 그리고 연도 등을 사용하였으며, 선형패널자료 분석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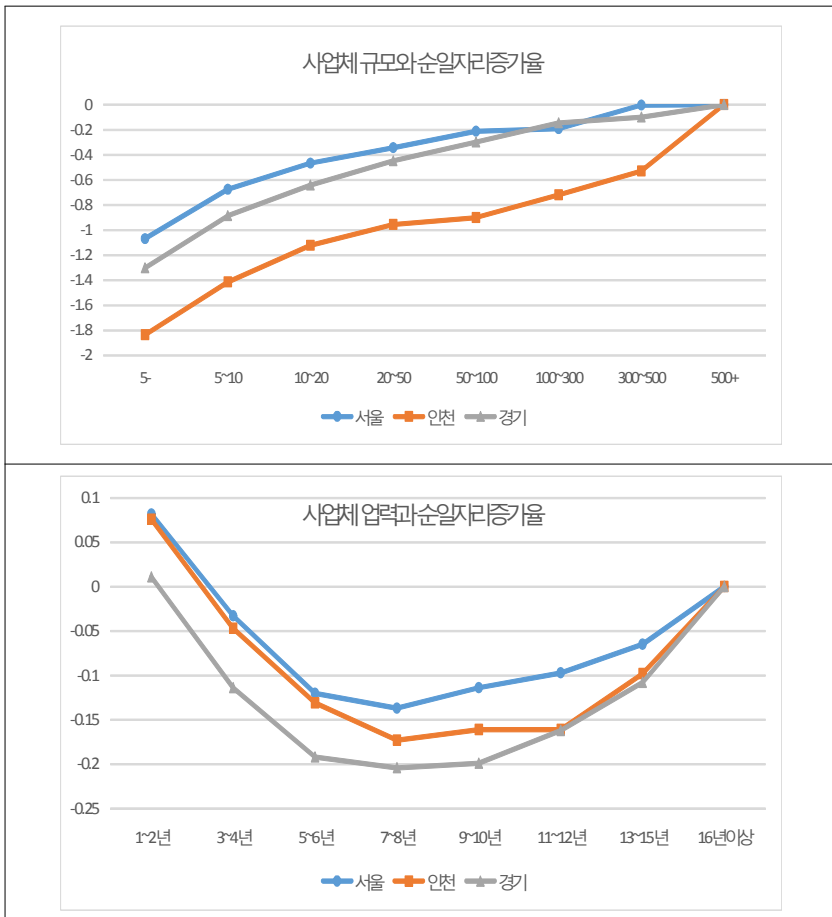
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립연도는 자발적으로 보고한 설립연도이다. 따라서 1000년도나 1900년도, 또는 1000년도 미만의 3자릿수로 응답된 관측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연도를 1950년도 이후로 신고한 사업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립연도가 조사차수마다 변동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빠른 연도를 해당 사업체의 설립연도로 활용하였다.

2. 분석결과

가.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그림 4-1]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수도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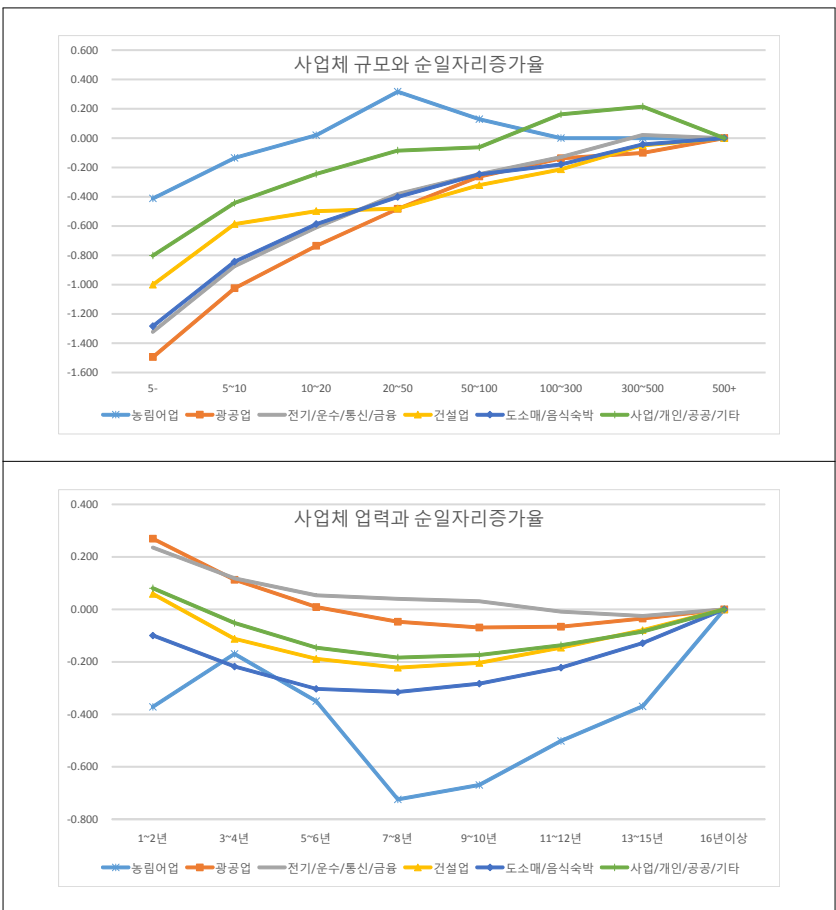
그림은 앞서 설명한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 패널분석을 수행한 추정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규모와 업력을 비롯한 사업체 단위의 특성요인들이 통제된 후, 500인 이상 규모 집단을 기준(0)으로 하여 각 규모 집단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사업체 단위의 특성들이 통제된 이후에 각 집단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4-1]의 수도권 지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에 대해서는 업력이 길어질수록 U자형의 순일자리 증가율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에 해당하는 업력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젊은 사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2]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별로 추정치의 크기가 확연히 구별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농림어업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들보다 대부분의 규모 수준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적은 수도권 지역의 특징인 것으로 사료되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사업/개인/공공/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광공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건설업, 광공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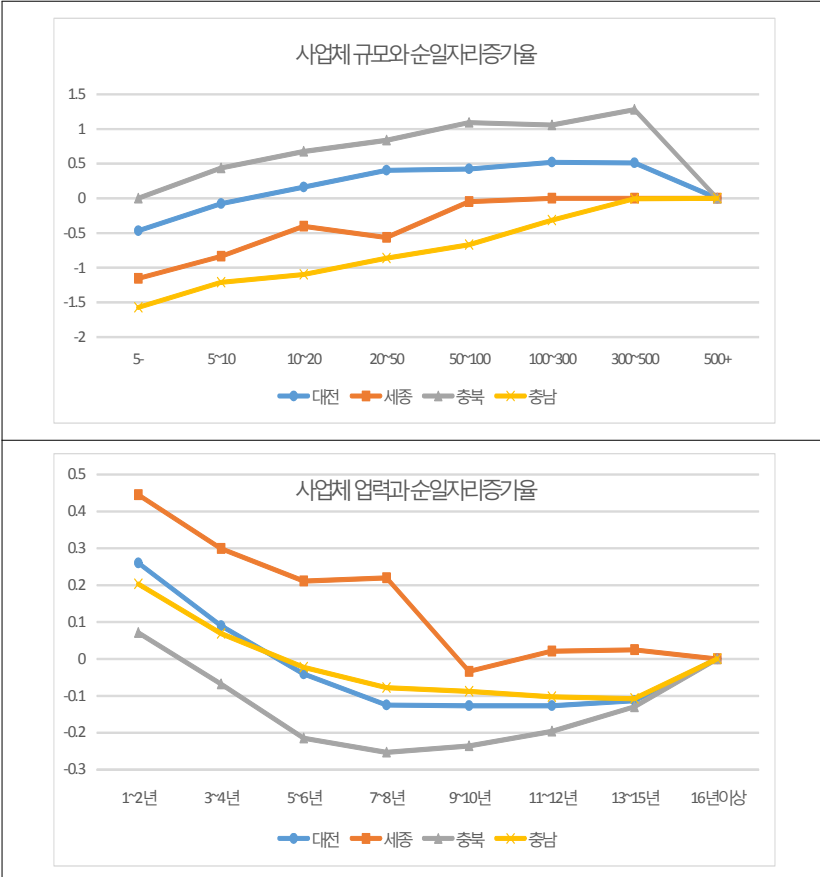
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U자형의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농림어업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력집단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사업/개인/공공/기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농림어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2) 수도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4-3] 충청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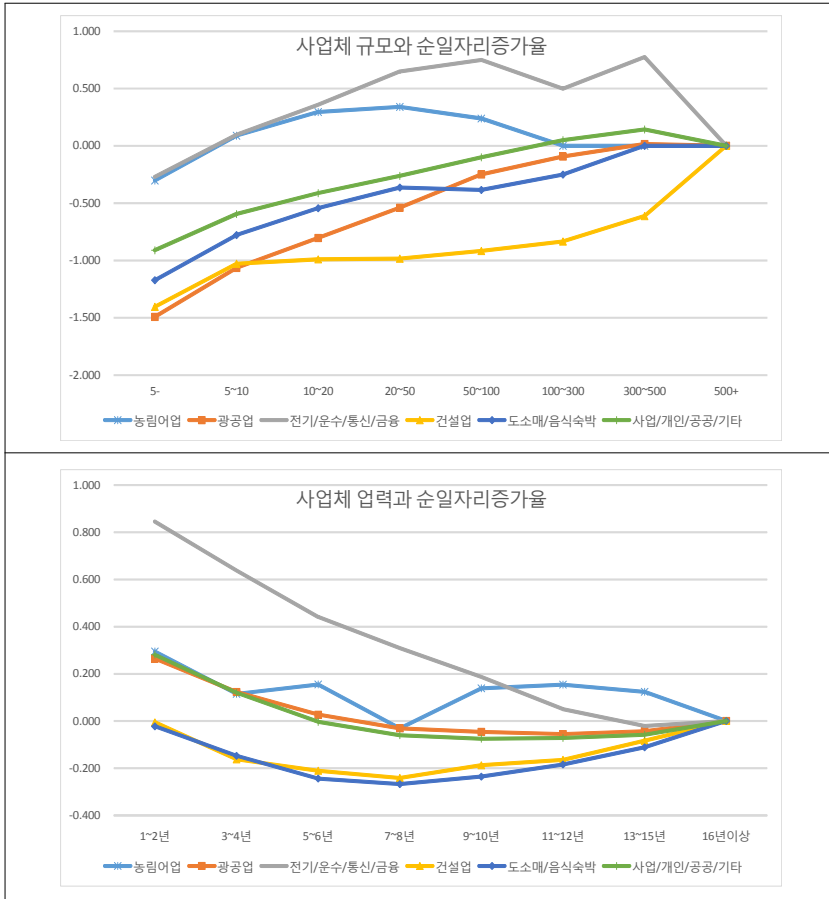
주: 업력이 0년인 신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나. 충청권 : 대전/세종/충북/충남

[그림 4-3]은 충청권 지역의 시도별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수도권 지역의 결과와 유사하게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모든 규모 집단별로 높은 순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

(그림 4-4) 충청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U자형의 그래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모든 업력 집단별로 높은 순증가율을 보이지만, U자형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규모별 결과와는 달리 업력별 결과에서는 충북 지역의 순증가율 수준이 다른 지역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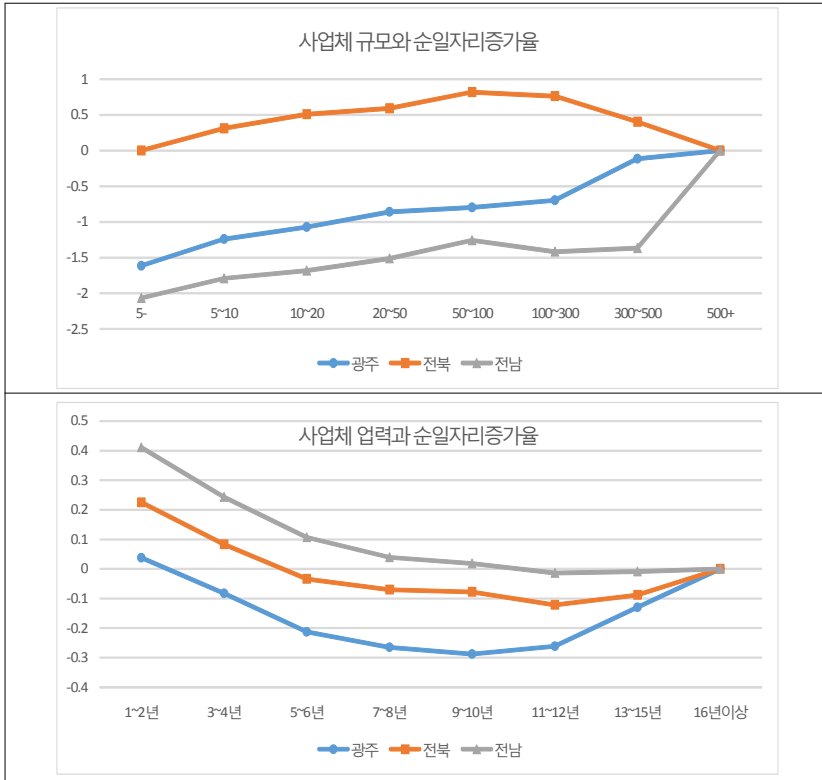
[그림 4-4]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

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충청권 역시 수도권 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설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광공업, 건설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U자형의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력집단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 농림어업, 광공업, 사업/개인/공공/기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호남권 : 광주·전북·전남

[그림 4-5]는 호남권 지역의 시도별로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호남권의 지역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10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의 순증가율 수준은 각 규모집단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U자형의 결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두 지역은 그 경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단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5] 호남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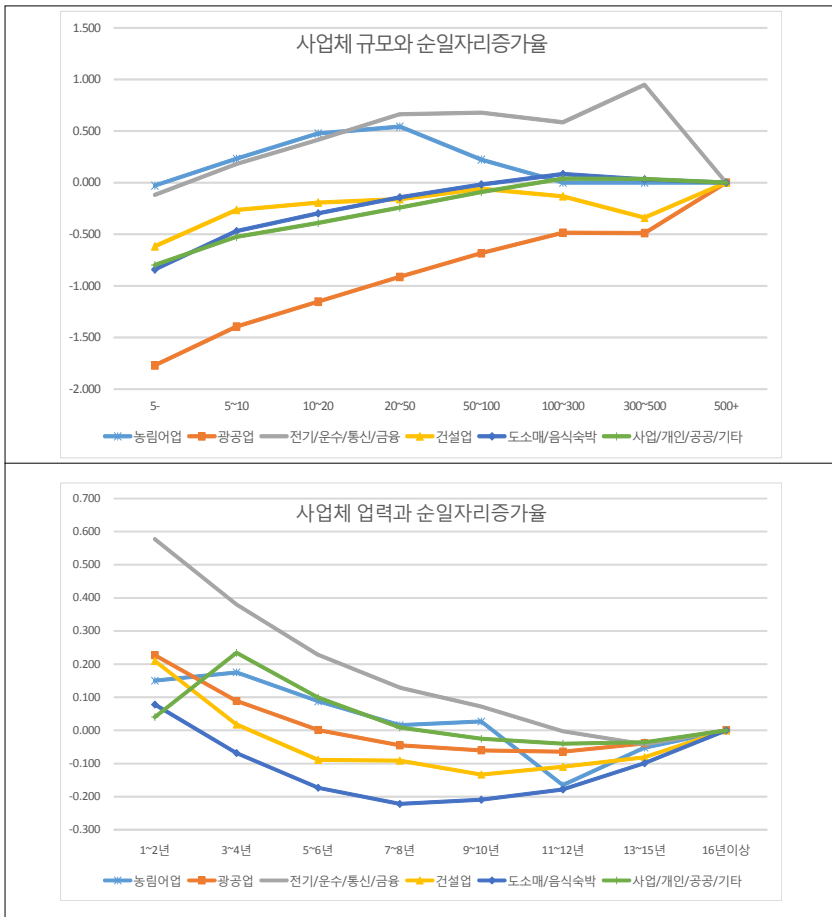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4-6]은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증가율이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U자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호남권 사업체들 사이에서 산업별 비교를 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력집단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기타,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6) 호남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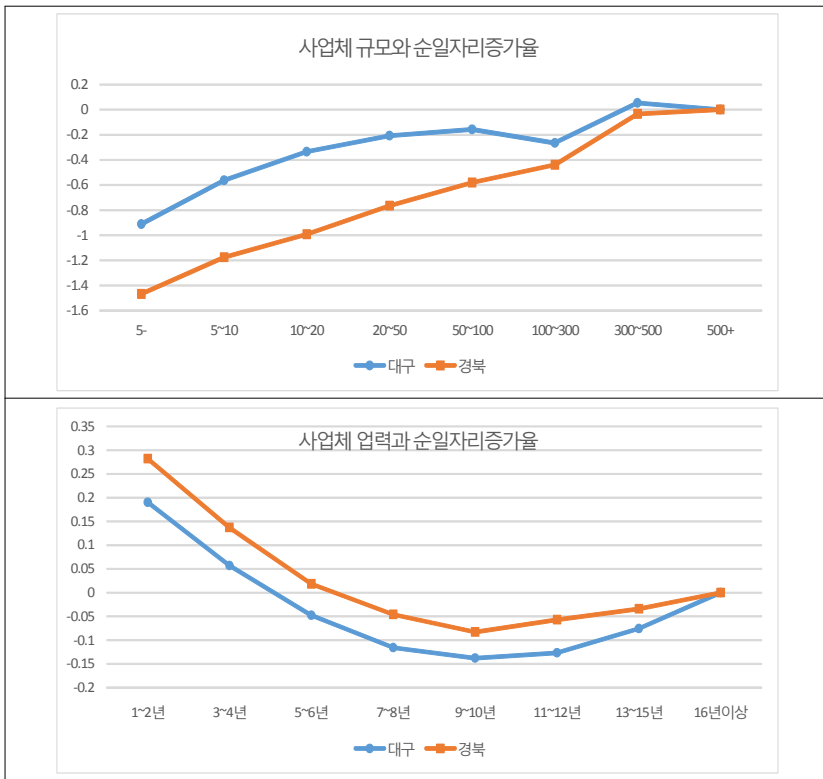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라. 대경권 : 대구 · 경북

[그림 4-7]은 대경권 지역에 속하는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업체 단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도 높아지는 단조 증가의 경향이 두 지역에서 모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지역 간 크기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도 두 지역에서 모두 U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년 업력 집단의

(그림 4-7) 대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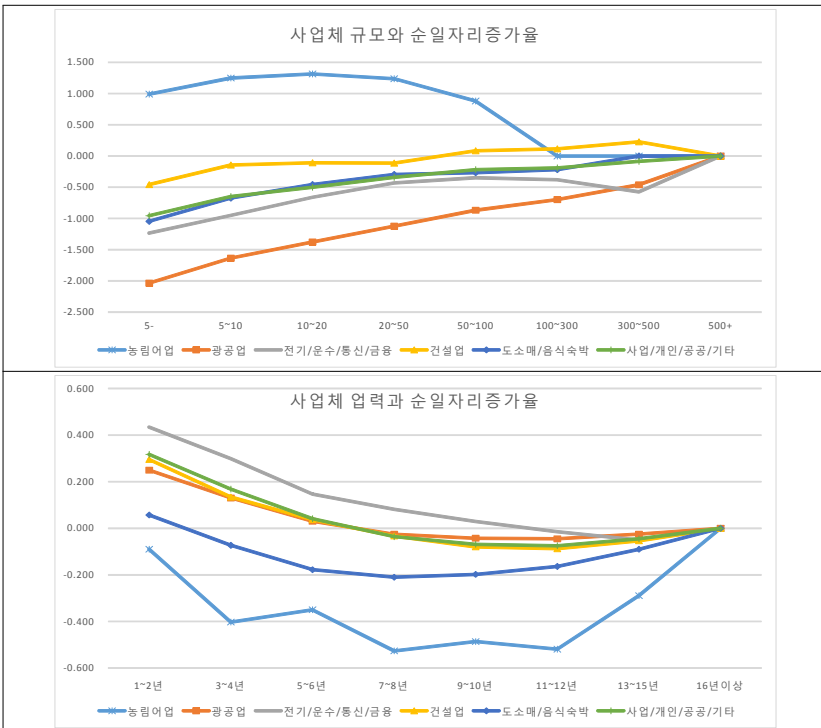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순일자리 증가율이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두 지역 사이의 순증가율 크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8]은 대경권(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경권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체 규모와는 거의 상관없이,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개

[그림 4-8] 대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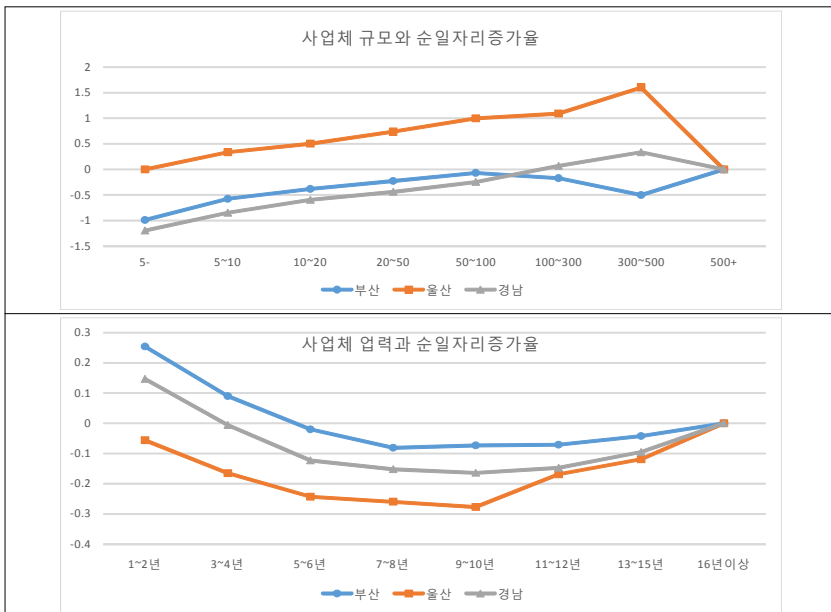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경권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U자형의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농림어업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서 순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산업부문들은 주어진 업력에 대해서 평균 순증가율 수준이 매우 유사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 부울경권 : 부산 · 울산 · 경남

[그림 4-9]는 부울경권 지역의 시도별로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울경권의 지역에서는 규모가

[그림 4-9] 부울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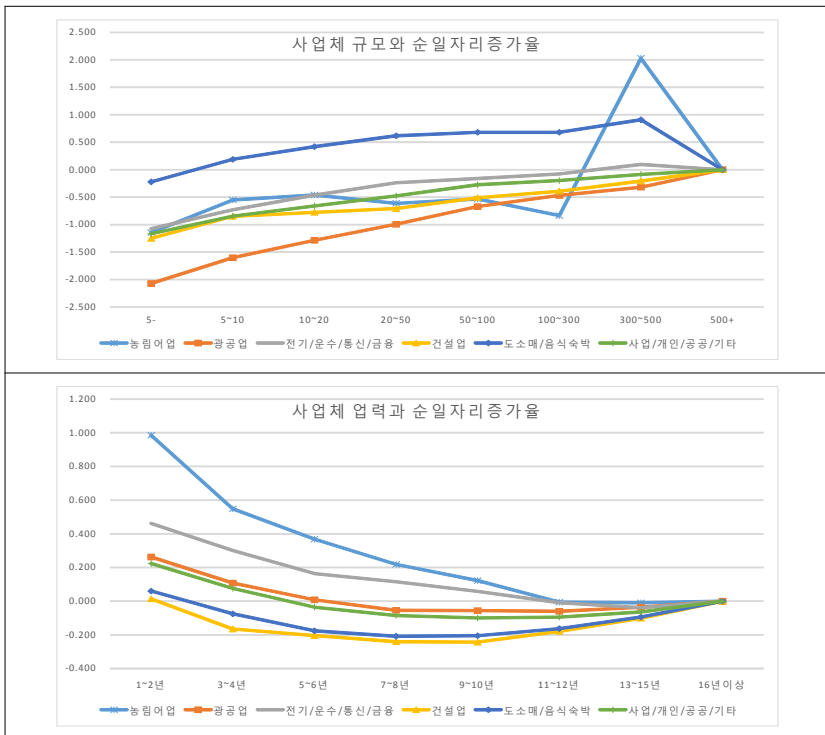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커질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경향이 뚜렷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지역의 순증가율은 각 규모집단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의 변화 경향은 U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의 경우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율이 16년 이상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 반면,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16년 이상 집단에 비해서 업력이 짧은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은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

(그림 4-10) 부울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농림어업 부문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울경권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 분야에서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증가율이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와중에 일부 산업부문에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U자형의 관계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울경권 사업체들 사이에서 순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업력과는 상관없이,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사업/개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건설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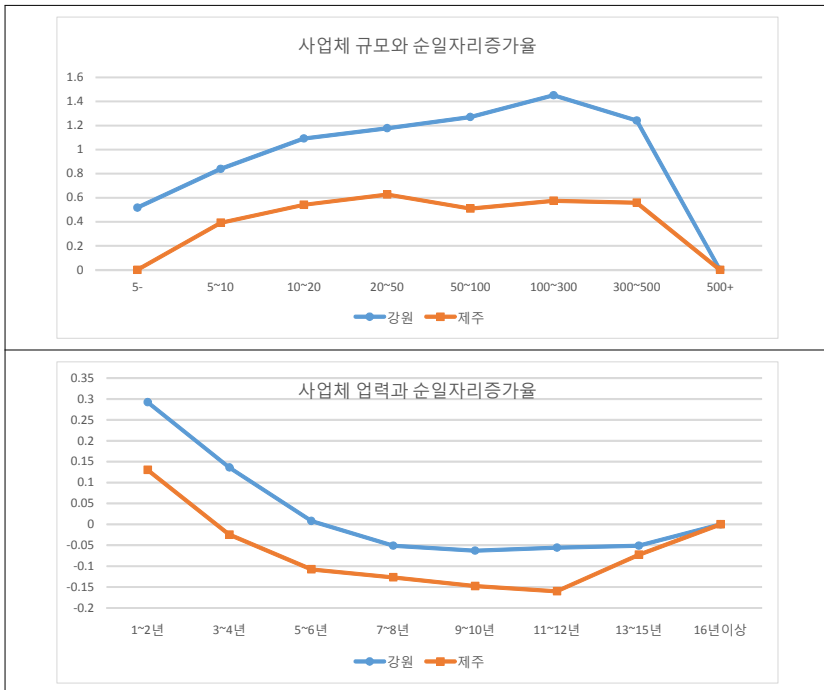
바. 강원·제주권 : 강원·제주

[그림 4-11]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사업체 단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해 공통적으로 역U자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보다는 강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모별로 큰 순증가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력에 대해서는 U자형의 그래프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1~2년 업력에 해당하는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사이의 순증가율 차이는 제주도보다 강원도에서 더 크게 벌어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12]은 강원·제주권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광공업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광공업 부문의 산업비중이 적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는 산업부문

은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광공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도와 강원도 소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단조 감소 또는 U자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쭉날쭉한 농림어업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순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공업 부문과 사업/개인/공공/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규모별 순일자리 증가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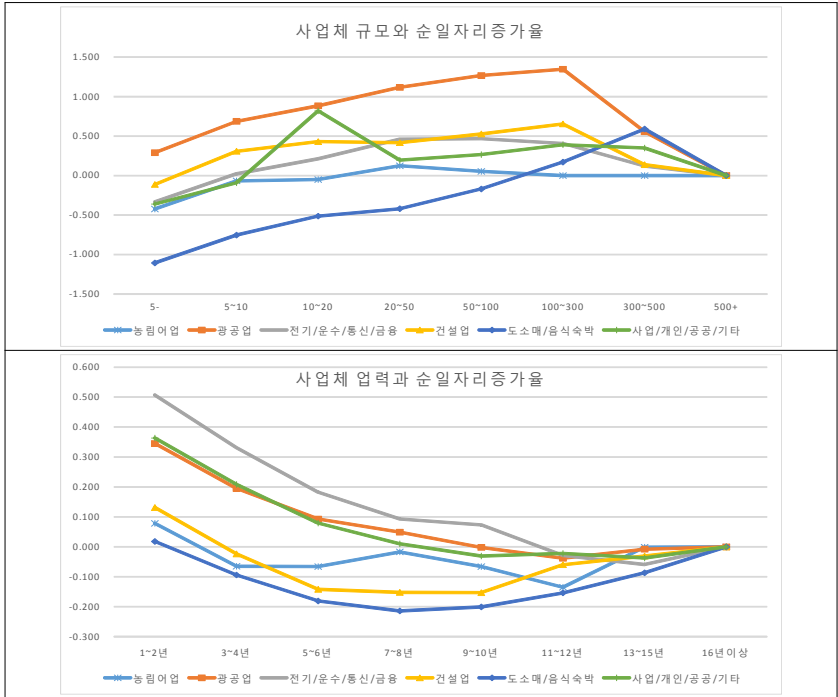
(그림 4-11) 강원·제주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4-12] 강원·제주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규모 및 업력을 비롯한 사업체 특성이 서로 통제된 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적 통계량을 바탕으로 규모집단별 순일자리 증가율을 비교하면,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기여가 상당히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체의 업력이 함께 통제될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창출효과는 대부분 시장 진입을 포함

하는 젊은 업력의 효과로 대변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지할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와중에, 이러한 경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체 규모보다는 업력 이 일자리 변동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기여의 정도 차이는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세종 및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해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약 4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율이 약 5%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주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울산과 같은 지역은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부문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산업 구조가 상이한바, 지역 내에서 규모 또는 업력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부문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활용하면, 창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산업부문 역시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제 5 장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문제제기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인구이다. 도시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의 유출입을 파악해야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도시의 인구는 해당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인구가 많거나 늘어난다는 것은 효율적인 기반시설, 빠른 정보교환,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유출입을 전망하여 향후 일정 시점 이후의 목표 인구를 확정하는 것은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때론 과도한 목표 인구가 많은 병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목표 인구를 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의 경제력에는 일자리가 기반이 되어 있다.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지역 전체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아울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한 일자리가 증가하

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인구와 일자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제학에 기반을 둔 엄밀한 이론들은 일자리로 인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이 이론과 같은지는 뚜렷하지 않다.

미래 추계인구와 일자리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연구는 엄밀한 검증 절차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종사자와 가족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면서 전후방 연관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유발하고, 그 종사자와 가족들이 연이어 지역에 정착하면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이나 사회계정행렬이 산업 간 중간재 투입-산출의 관계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증가가 인구증가를 야기한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수요이론’에 의하면,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은 서로 상이한 경기변동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일자리 증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한 일자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일자리를 따른다(People follows jobs)”가 될 것이다.

반면, ‘공급이론’이라 불리는 다른 범주의 이론도 존재한다. 일자리의 증감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 ‘공급이론’의 주된 내용이다.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거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성(amenities)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 공공안전시설 등이 확충되어 편의성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유치를 유발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는 주장이 ‘공급이론’의 핵심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쟁은 현실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수요이론’과 ‘공급이론’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의 내

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일자리의 증감이 인구의 유출입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역별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근로자들의 지역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지역정책으로서의 정책적 색깔은 희미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구이동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 변동을 야기한다면, 지역별로 해당 지역 거주지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고용정책이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된 내용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방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오정일·안기돈, 2007). 최근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변동과 인구이동 사이의 ‘공급이론’에 대한 검증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지역별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요이론’에 국한되어 인구이동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헌수·황태일(2003)은 연립방정식 체계에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을 결합함으로써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고용 결정식’과 ‘인구 결정식’을 연립방정식 체계에 포함하여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고용과 인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본인들의 연구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구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미래 추계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성우(2002)는 인구이동을 가구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독립이동’과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이동하는 ‘연계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독립이동과 연계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이동에는 지역 특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연계이동에서는 지역 특성보다 가구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송·김석영(2002)은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유입인구 비중, 평균적인 교육수준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인구동이 유발된다는 ‘수요이론’의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추환·김명수(2006)의 연구 역시 전형적으로 ‘수요이론’을 가정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수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가운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임금격차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은영(2004)은 한국의 16개 시도 간 인구이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록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분석은 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도시 사이의 인구이동과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을 명확하게 유형화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론’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인구의 유출입이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지역별로 공급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제3절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수준에서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변동률이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변동과 인구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의 일자리 변동률을 집계하고, 이것이 인구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단순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일자리 변동률(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재배치율)을 집계하여 4개년(2011~2014년) 동안의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전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인구이동률(유입률, 유출률, 순유입률)을 계산하여 4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분석의 핵심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외 통제변수로는 인구구조 요인으로 인구밀도를 사용하였고, 산업요인으로는 광공업 비중,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사업/개인/공공/기타 서비스업 비중 등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체 특성 요인으로 규모를 활용하고자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5~9인 사업체 비중, 300~499인 사업체 비중,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핵심적 설명변수인 인구이동률과 종속변수인 일자리 변동률이 모두 변화율인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연도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패널모형에 입각한 고정효과 추정치를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시차효과를 함께 고려하고자 이전 연도의 인구이동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추정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모형 1) JGR_{rt} = \alpha + \beta_1 inflow_{rt} + \delta_1 outflow_{rt} + \Gamma X + \varepsilon_{rt}$$

$$(모형 2) JGR_{rt} = \alpha + \beta_1 inflow_{rt} + \beta_2 inflow_{r,t-1} + \delta_1 outflow_{rt} + \delta_2 outflow_{r,t-1} + \Gamma X + \varepsilon_{rt}$$

$$(모형 3) JGR_{rt} = \alpha + \theta_1 netflow_{rt} + \Gamma X + \varepsilon_{rt}$$

$$(모형 4) JGR_{rt} = \alpha + \theta_1 netflow_{rt} + \theta_2 netflow_{r,t-1} + \Gamma X + \varepsilon_{rt}$$

여기서 JGR_{rt} 는 t 기에 r 지역에서의 순일자리 증가율, $inflow_{rt}$ 는 r 지역의 $t-1$ 기 주민등록인구 대비 t 기의 유입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outflow_{rt}$ 는 r 지역의 $t-1$ 기 주민등록인구 대비 t 기의 유출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netflow_{rt}$ 는 t 기에 r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의 순유입(=유입-유출) 비율을 의미한다. 아울러, 위 4개 모형을 순일자리 증가율 외에 다른 일자리 변동률(창출률, 소멸률, 재배치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표 5-1>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핵심적인 설명변수는 지역별 인구이동률 변수이다.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에는 인구유출보다는 인구유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전년 대비 인구유입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0.17%포인트 정도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의 인구이동이 현재의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모형2의 결과를 살펴보면, 1년 전의 인구이동률은 현재의 순일자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현재의 인구유입만이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에서 유출을 뺀 인구순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모형3과 모형4의 결과로부터 인구순유입은 순일자리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1년 전)의 이동까지도 현재의 순일자리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역으로의 인구순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1〉 지역별 인구가동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순증가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t 기)	0.171**	0.185**		
인구유입($t-1$ 기)		0.146		
인구유출(t 기)	0.036	-0.012		
인구유출($t-1$ 기)		-0.183		
인구순유입(t 기)			0.198**	0.211**
인구순유입($t-1$ 기)				0.155*
인구밀도	0.001	0.001	0.001	0.001
광공업 비중	0.096	0.116	0.062	0.089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232	0.261	0.229	0.259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417	0.394	0.382	0.363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500***	1.451***	1.476***	1.431***
5~9인 사업체 비중	0.789*	0.768*	0.743*	0.737*
300~499인 사업체 비중	-17.575**	-18.929**	-16.706**	-18.460**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25.951***	-29.350***	-24.993***	-29.142***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160.948***	-155.746***	-154.215***	-150.709***
결정계수	0.161	0.164	0.158	0.162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표 5-2〉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창출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t 기)	0.087	0.103*		
인구유입($t-1$ 기)		0.063		
인구유출(t 기)	-0.073	-0.11		
인구유출($t-1$ 기)		0.048		
인구순유입(t 기)			0.089*	0.095*
인구순유입($t-1$ 기)				0.076
인구밀도	-0.001	-0.001	-0.001	-0.001
광공업 비중	-0.1	-0.094	-0.102	-0.089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035	-0.025	-0.036	-0.021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194	-0.21	-0.196	-0.205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0.054	0.041	0.052	0.03
5~9인 사업체 비중	-0.233	-0.216	-0.236	-0.239
300~499인 사업체 비중	-14.033***	-15.096***	-13.973***	-14.829***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16.572***	-19.169***	-16.505***	-18.530***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26.317	26.11	26.766	28.477
결정계수	0.493	0.496	0.493	0.495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표 5-2〉와 〈표 5-3〉은 각각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창출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앞선 순증가율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구유출은 창출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구유입 및 순유입은 일자리 창출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인구순유입의 과거 값은 현재의 일자

리 창출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일자리 소멸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이 각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인구의 순유입이 미약하게나마 일자리 소멸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구이동이 현재의 일자리 소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소멸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소멸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t 기)	-0.084	-0.082		
인구유입($t-1$ 기)		-0.083		
인구유출(t 기)	-0.109	-0.098		
인구유출($t-1$ 기)		0.231		
인구순유입(t 기)			-0.109*	-0.116*
인구순유입($t-1$ 기)				-0.079
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광공업 비중	-0.196	-0.21	-0.164	-0.178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268*	-0.286*	-0.265*	-0.280*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610***	-0.604***	-0.578***	-0.568***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446***	-1.409***	-1.424***	-1.401***
5~9인 사업체 비중	-1.022***	-0.985***	-0.979***	-0.976***
300~499인 사업체 비중	3.542	3.834	2.733	3.631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9.379	10.182	8.487	10.612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187.265***	181.856***	180.981***	179.185***
결정계수	0.444	0.447	0.442	0.443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표 5-4〉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재배치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재배치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t 기)	0.003	0.021		
인구유입($t-1$ 기)		-0.02		
인구유출(t 기)	-0.182	-0.208		
인구유출($t-1$ 기)		0.279		
인구순유입(t 기)			-0.021	-0.021
인구순유입($t-1$ 기)				-0.004
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광공업 비중	-0.295	-0.305	-0.266	-0.267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303	-0.31	-0.3	-0.301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804***	-0.814***	-0.774***	-0.774***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392***	-1.368***	-1.372***	-1.371***
5~9인 사업체 비중	-1.255***	-1.201***	-1.215***	-1.215***
300~499인 사업체 비중	-10.49	-11.262	-11.241	-11.198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7.193	-8.987	-8.018	-7.918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213.582***	207.966***	207.747***	207.662***
결정계수	0.621	0.623	0.621	0.621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kosis.kr>).

〈표 5-4〉는 지역별 일자리 재배치율에 인구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일자리 재배치율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 변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인구이동이 증가할 때, 해당 지역에서의 일자리 변동이 얼마나 활발해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별 인구이동에 대한 변수들이 일자리 재배치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순유입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일자리 소멸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률은 증가시키지만 일자리 소멸률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두 지표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알 수 없는 결과가 추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유입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의 유출은 일자리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에서 유출을 뺀 인구순유입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지역별 인구순유입은 지역별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이 지지된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지역별로 인구의 유출보다 유입이 커서 순유입이 발생하면, 즉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일자리 역시 순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장의 결과가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급이론’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결과라 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론, 즉 ‘공급이론’과 ‘수요이론’은 서로를 배척하기보다는 현실에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이론’에 기반을 두고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인구가동이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이론’ 효과와 일자리 변동이 인구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이론’ 효과는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하여 인구가동과 일자리 변동을 연립방정식 체계 안에서 함께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동을 결정하는 편의성(amenities)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충분히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연립방정식 모형의 추정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실제 경제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는 어떠한지, 이러한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지역 간 차이 및 이를 통한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서의 지역별 일자리 동학의 특징 및 결정요인들은 향후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지역고용전략을 설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의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

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업을 통한 진입 사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입사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단순히 창업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기초지자체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에 속한 시군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하회하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규모 및 업력을 비롯한 사업체 특성이 서로 통제되었을 때,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체의 업력이 함께 통제될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창출효과는 대부분 시장 진입을 포함하는 짧은 업력의 효과로 대변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가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지역별 인구순유입은 지역별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로서,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현경·윤영희(2011), 『사업체 생멸현황분석』 2011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제I권 제4장, 통계청.
- 박추환·김명수(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22 (2), pp.97~113.
- 박현수·황태일(2003),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시군구의 인구 및 고용변동 추정」, 『국토계획』 38 (7), pp.43~52.
- 오정일·안기돈(2007),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 수 변화와 인구가동 간 인과성 검증」, 『국토연구』 53, pp.57~76.
- 윤윤규·고영우(2009),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빈송·김석영(2002), 「지역적 특성이 시군구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계획』 37 (2), pp.261~279.
- 이성우(2002),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18 (1), pp.49~82.
- 이재형·양정삼(2011), 『영세사업자 실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전병유·김혜원(2003), 『디지털경제와 일자리창출』, 한국노동연구원.
- 최은영(2004), 「지역 간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5 (3), pp.49~66.
- 한진희(2003),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중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KDI 정책연구』 25 (2), pp.3~53.
- 허식·사명철·박현승(2012),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중소기업청.
- Ayyagari, M., A. Demirgüç-Kunt, and V. Maksimovic(2011), “Who Creates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43 (1), pp.75~99.

- Birch, D. L.(1979), “The Job Generation Process,” unpublished report, MIT Program on Neighborhood and Regional Chang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_____(1981), “Who Creates Jobs?” *Public Interest* 65, pp.3~14.
- _____(1987),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Free Press.
- Cho, J., H. Chun, H. Kim, and Y. Lee(201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 New Evidence on the Role of Small Versus Young Firms in Korea,”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Early View (Online Version of Record published before inclusion in an issue)
- Davis, S. J., J. Haltiwanger, and S. Schuh(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MIT Press.
- Haltiwanger, J., R. S. Jarmin, and J. Miranda(2013), “Who Creates jobs? Small versus Large versu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 (2), p.347~361.
- Neumark, D., B. Wall, and J. Zhang(2011), “Do Small Businesses Create More Jobs? New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National Establishment Time Se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3 (1), pp.16~29.

◆ 執筆者

-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 2016년 12월 24일 인쇄
2016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방 하 남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100-2